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A Study on Policy Direc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2016. 12

이승우 · 고민규 · 윤영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이 승 우 : 제1장 1절, 제4장, 제5장 3절~5절, 제6장

<연구진>

고 민 규 : 제1장 2~3절, 제3장 2절, 제5장 4절

윤 영 준 : 제1장 4절, 제2장, 제3장 1절, 제5장 1~2절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김 현 용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실장)

김 현 숙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연구교수)

장 덕 현 (부산대학교 교수)

강 미 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사무관)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연구감리자

류 정 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발간사

어촌주민이 거주하는 어촌은 수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그럼에도 수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인 어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어촌과 어장을 연계하는 어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주체로서 어촌주민이 거주하는 어촌의 정주환경이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른 어가소득이 도시 가구 소득에 미치지 못하여 어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 귀어·귀촌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어촌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촌인구 노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를 촉진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어촌 청장년들의 높은 미혼 비율이다.

열악한 결혼여건의 어촌 미혼 청장년들 중에 동남아시아, 중국 등의 출신인 결혼이민자들과 다문화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문화의 차이, 한국어 구사능력의 열위 등으로 가정은 물론이고 어촌 공동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결혼여건이 좋지 않은 어촌의 청장년 중에 다문화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3월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이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어촌의 지리적 환경 및 어업 여건은 다문화가족의 지원 정책수단의 수혜를 받음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이다. 즉 다문화가족 지원의 첨병 역할을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영 혹은 위탁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어촌 다문화가정이 접근하기 불편하다. 또한 물때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일정한 시간에 지속적으로 다문화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어촌 다문화가정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어촌 다문화가정의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촌정책을 추진하는 해양수산부가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도시가구에 비하여 소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어촌 정주여건을 포함한 삶의 질도 낮다. 어촌은 인구가 점점 감소함과 동시에 어촌은 초고령화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작업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어업환경으로 어촌 다문화가정은 다문화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편익을 누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대부분은 이러한 어촌 다문화가정의 불리한 여건을 인식하고 있지만, 인적 및 예산 문제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은 어촌인구 감소와 노령화, 어촌의 배타적 성향 등 어촌의 당면한 문제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정도 다문화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과 법제도를 분석하고, 동시에 어촌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파악하여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정책목표, 정책방향, 정책과제, 그리고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우리 원의 이승우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았고, 고민규 위촉연구원과 윤영진 위촉연구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강미숙사무관, 동아대학교 김현숙 교수,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실장, 고창군 나남근 팀장, 여성개발연구원 윤정아 박사, 부산대학교 장덕현 교수, 사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흥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울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많은 분들이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심의, 자문 과정을 통하여 큰 도움을 주었다. 이 분들의 아낌없는 도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어촌 다문화가정의 정책 입안과 추진에 활용되어 어촌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2016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양 창 호

목 차

연구성과 요약	i
Executive Summary	v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
1. 선행연구	5
2. 소결	9
제4절 어촌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범위	10
1. 다문화에 대한 일반적 관점	10
2. 다문화가족의 법적 개념	11
3. 다문화가정 개념의 정립	12
4. 어촌 다문화가정	15
제2장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분석	17
제1절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분석	17
1. 다문화가정 관련 국외정책사례	17

2. 국내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20
제2절 다문화가정 관련 법제도 분석	43
1. 다문화가족지원법	44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45
제3절 문제점 및 시사점	47
1.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 정책 검토	47
2.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 법제 검토	50
제3장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분석	52
제1절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분석 개요	52
1.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분석의 개요	52
2.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수요 추정	53
제2절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분석	56
1.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사례 분석	56
2.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 설문조사	82
3.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	92
4.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방향 심층분석	105
제4장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115
제1절 정책의 필요성	115
1. 어촌인구 구성의 변화에 대한 대응	115
2. 어촌인적 자원으로서 역할	116
3. 어촌 개방화를 위한 매개체 역할	117
4. 어촌 구성원으로서 삶의 질 향상 정책 대상	117
제2절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119
1. 정책목표	119
2. 기본방향	120
제3절 정책과제	123

1.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	123
2. 어촌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과제	125
3. 어촌 다문화가정 활용을 위한 과제	128

제5장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실행방안 132

제1절 관련법령 개선	132
제2절 관련제도 개선	134
제3절 투자계획	135
제4절 거버넌스 체계 및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138
1. 거버넌스 체계	138
2. 관계부처의 협력체계 구축	139
제5절 추진 로드맵	140
1. 로드맵	140
2.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사항	141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42

제1절 결론	142
제2절 정책적 제언	144

참고문헌 147

부록: 1.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 조사 설문지	148
2.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조사 설문지	150

표 목 차

〈표 1-1〉 다문화가족의 법적 개념	12
〈표 1-2〉 다문화가정 정의 관련 법적 규정	13
〈표 2-1〉 일본 다문화공생추진플랜 주요시책	18
〈표 2-2〉 네덜란드 트레킹 시스템 추진 경과	19
〈표 2-3〉 제2차 기본계획 부처별·정책영역별 참여과제 비교	22
〈표 2-4〉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주요 내용 ·	23
〈표 2-5〉 2015년도 시행계획 영역별·부처별 예산규모	27
〈표 2-6〉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소관부처별 주요 사업내용	27
〈표 2-7〉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정책분야별 사업규모 현황	30
〈표 2-8〉 연안 시도별 특화과제	32
〈표 2-9〉 연안 시군별 특화과제	35
〈표 2-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 프로그램	38
〈표 2-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연인원 상·하위 3순위 지역	42
〈표 2-12〉 외국인 및 이민자 적용 법령	43
〈표 2-1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44
〈표 2-1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주요 내용	46
〈표 3-1〉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분석 및 분석대상	53
〈표 3-2〉 연안시군 목록	54
〈표 3-3〉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수요 추정값(인구총조사 활용)	54
〈표 3-4〉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수요 추정값(정책 설문조사 활용)	55
〈표 3-5〉 해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현황	57
〈표 3-6〉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사례 조사 지역	57
〈표 3-7〉 다문화가정 면접조사 면접지침	58
〈표 3-8〉 자율관리어업공동체	83

〈표 3-9〉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84
〈표 3-10〉 응답자 거주분포	84
〈표 3-11〉 다문화가정의 출신국가	85
〈표 3-12〉 다른 다문화가정과의 교류	85
〈표 3-13〉 다른 다문화가정과의 교류 계기	86
〈표 3-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여경험	86
〈표 3-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 장애요인(다중응답)	87
〈표 3-16〉 어촌 다문화가정으로서의 어려움(다중응답)	87
〈표 3-17〉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지	88
〈표 3-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여경험	88
〈표 3-19〉 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 장애요인	89
〈표 3-20〉 어촌 거주로 힘든 점(다중응답)	89
〈표 3-21〉 현재 경제적 활동(다중응답)	90
〈표 3-22〉 모국에 관련해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90
〈표 3-23〉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표본추출	93
〈표 3-24〉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94
〈표 3-25〉 지역별 응답자 구성비	94
〈표 3-26〉 어촌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유무	95
〈표 3-27〉 어촌 다문화가정의 정부 지원정책 이용에 대한 불리함	95
〈표 3-28〉 도시나 농촌과 비교할 때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	96
〈표 3-29〉 다문화 관련 정책사업 수행여부	96
〈표 3-30〉 어촌 다문화가정 중점 고려 정책방향(복수응답)	97
〈표 3-31〉 다문화가정 서비스 지역연계 지원방안	97
〈표 3-32〉 여성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역할 가능 분야	98
〈표 3-33〉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 담당인력	99
〈표 3-34〉 정책 수행상의 불편함	99
〈표 3-35〉 어촌 다문화가정 지원 제도/프로그램 유무	100
〈표 3-36〉 정부지원정책의 어촌 다문화가정 이용 불리함	100
〈표 3-37〉 어촌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필요성	101
〈표 3-38〉 다문화 관련 정책사업 수행여부	101

〈표 3-39〉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	102
〈표 3-40〉	어촌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연계방안 필요성	102
〈표 3-41〉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역량 발휘 가능성	103
〈표 3-42〉	심층분석 논의 사항	106
〈표 3-43〉	현 정책에 대한 입장 및 정책의 필요성	107
〈표 3-44〉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지향점	109
〈표 3-45〉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방안: 법제/지역/대상/지원체계 구축/ 활용	110
〈표 3-46〉	다문화가정 정책의 특화: 지역별, 대상별, 어촌계별	112
〈표 3-47〉	특화정책 수립 가능성 및 실행방안	113
〈표 5-1〉	투자계획	136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체계	4
〈그림 2-1〉 제1·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비교	21
〈그림 2-2〉 지자체별 사업규모 및 예산현황	31
〈그림 2-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체계	40
〈그림 2-4〉 연안시도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형태별 설치현황	41
〈그림 5-1〉 어촌 다문화정책의 로드맵	140

연구성과 요약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1. 연구의 목적

- 다문화가족 지원의 관점에서 벗어나 어촌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어촌 발전의 참여자로서의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
 - ‘가족’으로부터 ‘가정’으로의 인식 전환을 통해 지역공동체 및 지역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다문화가정 접근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표〉 본 연구 방법의 특징

특징	주요 내용	자 료 수 집	방법론 선정 이유
문헌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관련 선행연구 - 다문화가정 관련 국내외 정책분석 - 다문화가정 관련 법제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 법제도 및 정책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관련 연구가 미흡하여 기초 환경 분석 필요
현장 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생활 적응(어촌생활의 모습, 어업형태, 자조모임) - 문화적 차이(애로사항, 해결방안) - 자녀양육(자녀 돌봄서비스, 자녀교육) - 교육 및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인터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현장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기초적 정책육구 및 생활실태 파악

〈표〉 본 연구 방법의 특징(계속)

특징	주요 내용	자료 수집	방법론 선정 이유
설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어촌 생활 및 경제적 활동, 다문화가정 필요서비스, 다문화가정 인적역량 - 다문화가정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실태, 필요한 정부지원 및 협력,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소속 다문화가정 대상 설문조사 - 연안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및 다문화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에 대한 통계적 일반화 시도,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 파악 및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목적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실태 및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지원 실태 파악
집단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정책 입장자 및 정책 필요성 -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지향점 - 다문화가정 특화정책 수립가능성 및 실행방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관련 논의사항 - 다문화가정 정책 관련 어촌 잠재 제약/촉진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중앙, 기초), 연구기관, 수협 등 전문가 대상 집단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자문 및 논의

2)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기존의 다문화가족 중심 지원정책으로부터 어촌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가정 중심 지원·활용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방안을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이 특징

- 어촌인구 구성의 변화에 대한 대응, 어촌 인적자원의 역할, 어촌 개방화를 위한 매개체, 어촌 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필요성에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수립 가능성 검토
-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기반 구축, 어촌 다문화가정 지원, 어촌 다문화가정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수단이 되어야 함
-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목표는 ‘어촌 다문화가정의 지원과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은 첫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촌 다문화가정 지원, 둘째 결혼이민자 고유문화 및 경험 활용, 다문화가정 관련 부서 간 정책 연계,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 어촌 특성 반영한 정책추진체계 구축임
-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지원과 활용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립, 추진하여야 함
- 정책 기반 구축 과제는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수행, 정보의 효율적 분산체계 마련,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음
- 어촌 다문화가정 지원 과제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보완, 어촌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어작업 및 수산가공업 관련 기술훈련 지원, 어업공동체 내 다문화가정 교류 촉진 프로그램 지원, 어촌 다문화가정 화합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음
- 어촌 다문화가정 활용 과제는 전통문화 활용, 음식문화 활용, 친인척 어업종사여건 조성, 어업경영 참여기반 조성, 어촌공동체 여성도우미 역할 부여 등이 있음
-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제도 개선, 투자계획, 거버넌스 체계 및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음
- 법적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개념의 법적 정립을 통한 다문화정책대상 확

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소관부처로 해수부 참여, 해수부 연계정책 발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해양수산관계법령 연계·적용 검토, 연안시군 지자체 관련조례 입법 검토 등이 필요함

- 관련제도 측면에서는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파악을 위한 체계 마련, 어촌 공동체가 참여하는 다문화가정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경제적·비경제적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지원, 정책대상자별 접근 및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함
-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업관련단체 및 어촌계를 이용하고 관계부처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적 기여

- 다문화가족 지원의 관점에서 벗어나 어촌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어촌 발전의 참여자로서의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
- ‘가족’으로부터 ‘가정’으로의 인식 전환을 통해 지역공동체 및 지역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다문화가정 접근

3) 기대효과

-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정책수단 개발과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한 실행방안 마련으로 어촌 다문화가정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앙부처의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
-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초지자체 및 어업인관련단체의 관심과 지원 활성화에 기여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Policy Direc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1. Purposes

- Departing from the perspective of simply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the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direc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in fishing villages as a member of fishing village community as well as a participant of its development.
- The study takes an approach in the relevance of local community and local society by shifting the awareness from ‘family’ to ‘household’.

2. Methodologies and features

1) Methodologies

Features	Major contents	Data collection	Reasons for selection
Literature re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ceding study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ies - Analyze domestic and foreign policy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ies - Analyze legal system regarding multicultural famil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ceding study - Investigate legal systems and policy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ed to conduct basic environmental analysis due to the lack of related research in Korea
Field case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aptation to the life of fishing villages (life and type of fishing villages, support groups) - Cultural difference (difficulties, solution measures) - Child rearing (child care service, child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the-spot interview with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 On-the-spot interview with those in charge o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entify basic policy desire for the benefit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and understand their living status

Features	Major contents	Data collection	Reasons for sel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ucation and finding jobs 	<p>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p>	
Surv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icipation to the program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of fishing villages, services necessary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human capacity of multicultural families - Systems and programs to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policy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necessary government support, cooperation and policy dir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duct a survey to multicultural families who belong to self-managed fisheries community - Carry out survey to those in charge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in coastal cities and districts as well as government officials responsible for multicultural famil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nd to make a statistical generalization on the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and aim to use it as a basic material for understanding the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as well as establishing policy direction - Understand the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and the policy status for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Group inter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fferent positions in the current policy and the necessity of a new policy - Policy direc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p interview with experts working in the gover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sultation and discussion for establishing policy direc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Features	Major contents	Data collection	Reasons for selection
	fishing villages –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specialized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action plans – Discussion topics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programs – Potential restriction/promotion factors in regards to multicultural family policy	(central, basic), research institutions, fisheries cooperatives etc.	in fishing villages

2) Features

- Conventional studies were focusing on the policy that supports multicultural families. However,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shift the perspective towards support & application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fishing villages.
- It reviews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to satisfy the following needs; response to the demographic changes of fishing villages, the role of human resources in fishing villages, the medium for opening fishing villages and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s a member of fishing villages.
- Policy target and basic policy direc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were established. Accordingly, the study suggests various policy tasks for establishing a policy found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supporting them and applying policies to them.

3. Results

1) Summary

- Departing from a unilateral policy of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policy to provide opportunities to utilize their experience and knowledge. Therefore, relevant policies should ultimately lead to the improved quality of lives.

- The policy target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should be 'improving the quality of lives by supporting and making use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 The basic policy direction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are as follows; first,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ves, second, making use of those immigrant for marriage and their genuine culture, connecting policies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taking a mid-to-long term approach to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and establishing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fishing villages.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found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and to set up and implement various policies for supporting and making use of them.
- Tasks for establishing a policy foundation include conducting survey to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building an efficient system for distributing information, and operating education programs for shifting awareness on immigrants by marriage.
- Tasks for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consist of supplementing education programs for learning Korean, supporting technical training related to fishing works and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supporting exchange programs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communities and supporting programs for harmonizing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 Tasks for making use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include utilizing their traditional culture and food culture, creating an environment for engaging in fisheries to relatives and in-laws, granting a guidance role to women in fishing communities, etc.
- Policy task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can be implemented by improving legal system, establishing investment plans and governance system as well as cooperation system among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and setting up a specific implementation roadmap.
- From legal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bjects under the multicultural related policy by establishing the legal concept of multicultural family. Als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should participate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ing policy as a competent department and discover MOF related policie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review connecting and

applying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laws to MOF related laws, and the legislation of related ordinance to local governments of coastal cities and districts.

- Related system should also be improved by establishing a system for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and discovering multicultural family policy participated by fishing communities. It is also essential to support economic and non-economic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and come up with approaches and action plans per policy subjects.
- In terms of governance, it is necessary to use fisheries related organizations and fishing cooperatives and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among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2) Policy contribution

- The study presents policy direction by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which lead to strengthen the support for the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n, it builds a foundation to connect with oceans and fisheries sector and fishing communities
- The study vitalizes the employment and spreads the gender equality by utilizing the capacity such as culture and experience of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is, it suggests methods to support and apply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3) Expected benefits

- It provides action plans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policy and the development of policy measur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By doing so, it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quality of their lives.
-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system in the central government regarding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 It also contributes to increasing interests and supports on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ing villages from basic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fishermen related organization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경제 개방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다국적 기업은 물론이고 다문화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2년)에 따르면 전국을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가구 수는 2009년 154,333가구이었지만, 2012년 266,547가구로 3년 만에 72.7%가 증가하였다. 또한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 중 여성이 80.7%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대우 등으로 인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언어적 문제와 이질적 환경에 적응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¹⁾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3월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이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은 다문화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이다. 국민 삶의 질 수준은 계층별, 소득별, 지역별로 서로 다르다.

특히 소득수준과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은 다른 지역의 삶의 질보다 열악하다. 따라서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또한 어촌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다문화가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족지원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예산과 인원 등의 한계와 함께 어촌의 지리적 불리함과 어업노동시간 등으로 어촌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필요한 실정이다.

어촌 다문화가족은 도시에 비해 밀접한 이웃관계를 가지며 어촌계라는 독특한 공동체조직 등 어촌만의 특성에 기인하는 여러 요인들이 단순히 부부, 자녀,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웃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갈등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어촌 다문화가족의 갈등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어촌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촌 다문화가족은 사회적 문제만 발생시킨다는 부정적 관점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사회·경제적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사회·경제적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촌 다문화가족은 어촌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하는 인적자원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어촌 발전에 기여하는 인적자원으로서 활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함께 해양수산부도 어촌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활용을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 발전은 어촌 정책의 목표이다. 어촌 다문화가족은 귀어·귀촌 가구와 함께 어촌 공동체의 구성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어촌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은 ‘가족’으로부터 ‘가정’으로 큰 틀에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은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으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과 지역공동체, 지역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어촌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조사하여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의 어촌 다문화가정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지원의 관점에서 벗어나 어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삶의 질 향상과 어촌 발전의 참여자로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연구범위를 정책 대상과 정책 내용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 대상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개념을 넘어서서 개념적으로는 다문화가정을, 공간적으로는 어촌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어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현재 여성가족부 및 중앙 정부의 각 부처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서도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존 다문화정책은 어촌의 특성에 따른 정책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다른 한편으로 정책 내용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서 다문화가정의 역량을 어촌이라는 공간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활용방안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어촌 다문화가정의 특성 및 현재 다문화가족 정책에 있어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 및 정책방향 및 어촌 다문화가정이 지역공동체와의 결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될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방향과 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등은 본 연구의 여러 한계로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둬를 밝힌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및 현장사례 분석, 설문조사, 심층분석(FGI)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헌조사로는 다문화가정 관련 선행연구 및 다문화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보고서, 정책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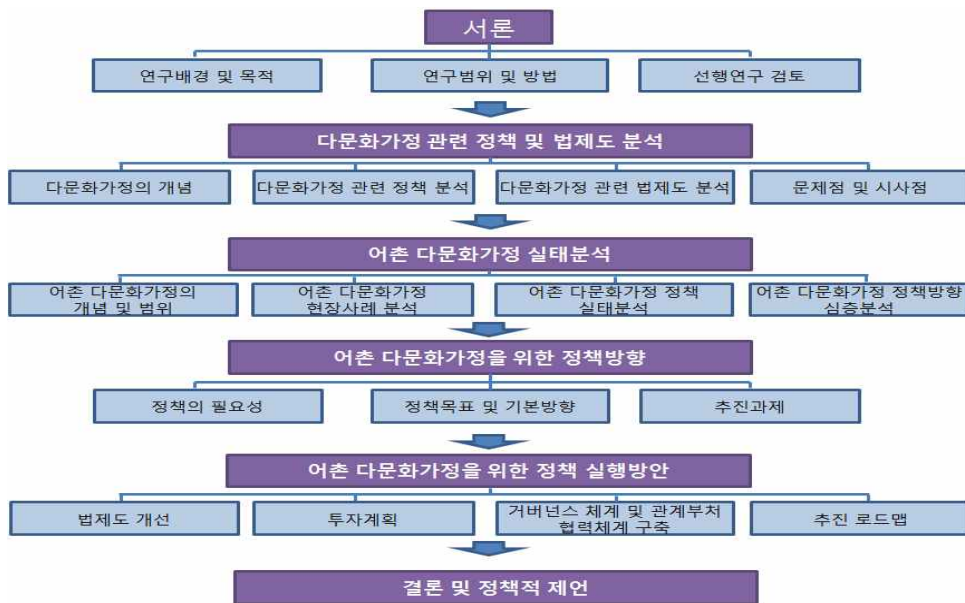
다문화 관련 현장 사례분석은 지역적인 구분으로 동, 서, 남해를 중심으로 각 2곳을 지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어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사례를

선정, 분석하였으며,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설문조사는 어촌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정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촌 다문화가정의 정책 실태 및 정책 필요성, 정책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방법은 이메일, 팩스를 통한 1차 설문과 전화통화를 이용한 2차 설문으로 이루어졌다.

추후 현장 사례분석과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브레인스토밍 초점집단면접(Brainstorming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의 다문화 관련 담당 공무원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의 정책 지향점을 맞추어 나갈 것이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법적, 대상별, 지원체계의 구축 및 활용과 관련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의 연구방법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체계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1)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²⁾

설동훈 외(2015)는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개선하여 지역밀착형, 수요자 중심형의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전북형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초자료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중장기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도내 14개 시군의 다문화가족 대상(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9,452명)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내 다문화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본현황자료를 마련하였다. 이들에 대한 조사항목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생활실태에 관한 것으로 조사표를 통해 진행되었다.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정책 여건과 전망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전북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 및 가족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정책 수립, 둘째 다문화가족의 전체 구성원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 모색, 셋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유형, 비율 등 다양성을 고려한 자녀 지원정책 수립, 전라북도 도민의 다문화 인식 제고 및 결혼이민자 도민의식 제고 방안 필요, 다섯째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과 추진체계의 정비이다. 이후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전, 목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2) 문화주체로서의 이주민 지원 정책 방안 연구³⁾

강현숙(2012)은 문화다양성의 관점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주민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주민의 문화역량을 발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안산 지역의 이주민 정책 및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연구와 함께 한국 이주민 정책과 지원 활동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

2) 설동훈·박신규·이순미·박순영,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라북도, 2015.

3) 강현숙, 『문화주체로서의 이주민 지원 정책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 관련 개념들의 분석적 정치화를 시도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이주민 정책의 과제로는 명료한 개념 규정, 타 부처 협력사업 확대,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 지자체 및 풀뿌리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3)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지자체 역할 강화 방안 연구⁴⁾

최승범(2014)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있어서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고, 사업유형별 사업 추진주체 및 사업 추진체계 등 사업 특성에 근거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등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의 지원에 통합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지자체 역할 강화 방안, 사업별 특성에 따른 지방이양여부 검토, 사업별 지자체 역할 제고방안 검토 등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관련 유사사례 조사 등과 함께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및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결론으로 제시하는 바는 재정지원상 국고보조금의 지자체 이전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나, 하나의 사업에 대한 복수부처 지원이 불가함을 지적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지방이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과 문화사업의 지방이양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4)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⁵⁾

김유경(2013)은 다문화가족 정책대상 확대에 따라 유사중복 정책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는 한편 다문화가족 내 역동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전반적인 복지정책의 틀에서 진단하고 접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내외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의 검토, 다문화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정책욕구와 다문화가족의 서비스별 수혜현황 및 사각지대 분석을 실시하여 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에서 제시되는 방안으로는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를 중심

4) 최승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지자체 역할 강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4.

5) 김유경,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3.

으로 하며 가족정책·이주민 정책으로 전환, 중앙부처 간 역할과 기능 재편,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전달체계 개선, 다문화가족지원정책 형평성 담보, 가족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지원의 사각지대 개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전문화,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및 지역사회 통합을 제시하였다.

5)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⁶⁾

박복순(2013)은 다문화가족의 변화 전망 및 새로운 정책 모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개관해 정책방향 설정 및 관계 법령 정비 방안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문화가족의 분화와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현행법령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지원 관련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의 한계를 지적하고, 결혼이민자 및 초기적응이라는 제한적인 지원범주를 밝히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지원 대상, 지원 사업, 전달 체계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각기 제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에 있어 국적 부분과 가족 결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을 정의하는 안, 이주민과 가족을 결합하여 다문화가족을 정의하는 안,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례규정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 방안,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용어를 순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부처 간 연계 활성화, 대상범위 확대 및 가족관점의 사업기획 및 운영,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주문하고 있다.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흡수 통합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한 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6)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책과제⁷⁾

박대식 외(2011)는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

6) 박복순,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3.

7) 박대식·마상진·권인혜,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기 위해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다. 문헌조사, 면접 설문조사, 우편조사, 심층면접조사, 외국사례 분석, 전문가 및 관련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국내외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사업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정책적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부처·기관별의 유사한 사업들을 분산 추진하여 정책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며, 지역적으로 통합된 지원창구가 부재하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체들 사이의 역할에 대한 분배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부분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가 부족하며, 정책의 사각지대가 있으며, 지역별 특성 및 수요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사업 발굴의 노력이 미흡하며, ‘가족’보다는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편중 등이었다.

이어 기본방향은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단기적 정책과제 및 중장기적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방향은 크게 건강가족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다문화가족 접근하기,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대책,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 정책지원의 세 가지이다. 단기적 정책과제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농교육 프로그램 개선, 한국어교육 개선, 결혼이민자 자녀의 방과 후 교육지원 강화, 다문화가족의 영농기반 구축 지원을 들고 있다. 중장기적 정책과제로 제시된 내용으로는 농어촌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및 확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경제활동 상의 농식품산업 활동 지원과 사회보장제도 차별해소 등이 있다.

7) 이주민 모국문화를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 개선방안⁸⁾

조현성(2011)은 모국문화를 활용한 정책 사업들을 검토·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8) 조현성·홍기원, 『이주민 모국문화를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 개선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으로 모국문화를 활용한 사업의 설정 및 발전방향,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기존의 모국문화 활용 사업들을 분석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이주민 모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모국 문화예술의 낮은 활용도와 큰 지역별 편차, 자부심은 있되 한국문화 적응이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인식, 이주민 다문화강사 활동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른 모국문화를 활용한 정책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문화정책의 특성 강화, 둘째 내국인 대상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셋째 사업에의 우선순위 설정, 넷째 모국문화 활용사업의 전문성 강화, 다섯째 사업추진체계의 개선을 들었다.

2. 소결

선행연구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 중심의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적 특성에 기반하고 있는 연구는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있으나 어촌 부분보다는 농촌에 특화되어 있는 연구로 어촌의 특수성을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적응 실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또한, 일부 어촌 결혼이주여성 연구도 도서 지역에 한정되거나 개인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다수로 파악된다.

어촌 다문화가족은 어촌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뿐만 아니라 어업행위를 위해 어촌계라는 경제사회적 공동체로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에서 확장된 다문화가정 개념으로 고민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일원으로서 다문화가정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 관련부처의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현황 및 지원 실태 중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어촌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정책의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정책 집행자의 입장에서의 문제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 및 실행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어촌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범위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감안할 때 어촌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정책대상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절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일반적 관점과 다문화가족의 법적 개념 검토를 통해 다문화가정 개념의 정립을 시도한다. 이후 본 연구의 대상인 어촌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범위를 제시한다.

1. 다문화에 대한 일반적 관점

‘다문화(多文化, multi-culture)’는 표면적 의미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가 한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 사회 내의 상이한 문화가 서로 만나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나타난 개념이다. 따라서 다문화는 한 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는 한편, 발생 가능한 사회적 갈등에 대비하려는 사회의 적극적 대응방식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는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대응이 내포되어 있다.

다문화에 대한 일반적 관점으로는 문화적 용광로 이론(cultural melting-pot theory), 샐러드 볼 이론(salad bowl theory), 비빔밥문화 이론이 대표적이다.

1) 문화적 용광로 이론(cultural melting-pot theory)

문화적 용광로 이론(cultural melting-pot theory)은 주지하다시피 이민자들을 주류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동화시키고자 한 미국의 대표적 인종정책을 용광로에 빗대어 나타낸 이론이다. 기존의 다수문화가 형성해 놓은 기준에 이주민 혹은 이주민 문화를 통합시키고자 하는 대표적 동화이론이다. 때문에 문화적 용광로 이론은 사회적 소수가 가진 고유성을 포기하고 새로운 지배문화의 습득을 전제하고 있어 주류 문화로의 편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2) 샐러드 볼 이론(salad bowl theory)

샐러드 볼 이론(salad bowl theory)은 샐러드 그릇 안의 다양한 재료들이 샐러드가 되어서도 각자의 고유한 모습을 유지하듯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질적 집단들도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문화다원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3) 비빔밥문화 이론

비빔밥문화 이론은 샐러드 볼 이론의 한국식 버전이라 할 수 있는데, 샐러드 볼 이론처럼 각자의 특성을 존중받지만 비빔밥처럼 전체로서의 더욱 완성된 형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다 개성과 융합을 함께 추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2. 다문화가족의 법적 개념

1) 다문화가족의 정의

「다문화가족지원법」(2015년 12월 22일 개정, 2016년 6월 2일 시행)은 ‘다문화가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둘째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⁹⁾이 그것이다. 한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¹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문화가족 중 24세 이하를 각각 ‘결혼이민자 등’과 ‘아동·청소년’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2) 다문화가족의 범위

다문화가족의 법적 규정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필수적이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항. 법률(제13604호). 2015년 12월 1일 개정.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항. 법률(제13604호). 2015년 12월 1일 개정.

며, 이들과 가족관계를 이루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 혹은 귀화허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혼인관계를 통한 가족 구성이 전제된 결혼이민자 가구와 귀화자 가구를 법적 지원정책의 범위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다문화가족의 법적 개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2015.12.1. 시행 2016.6.2.>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자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법’ 검색결과. 2016년 3월 25일 16시 30분 접속.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undefined>

3. 다문화가정 개념의 정립

1) 가족 vs 가정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현실에서는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히 볼 때 그 의미가 상이하다. 이러한 상이성은 ‘가족’과 ‘가정’이라는 용어의 의미 차에 기인한다. ‘가족’이 혈연·혼인·입양·친분 등에 의해 맺어진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혹은 그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에 비해 ‘가정’은 가족이 생활을 영위하는 본거지라는 의미가 더 크다. 즉, ‘가족’은 집단 또는 집단의 구성원을 보다 드러내고자 하는 데 반해, ‘가정’은 가족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이 영위되는 생활거주공간의 의미가 더 크다.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라는 내용을 말할 때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¹¹⁾는 것도 이런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개념으로는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어 보다 광의의 개념인 ‘다문화가정’ 개념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2) 법령상의 다문화가정 관련 규정

현행 법령 가운데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러 법적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관련 법적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의 정의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개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혼이민 개념 등이 해당한다.

〈표 1-2〉 다문화가정 정의 관련 법적 규정

법적 규정	법령 항목	정의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항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항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항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¹¹⁾ 이재분·김혜원·변종임·채재운, 『다문화가족 역량계발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방안 모색』, 한국교육개발원, 2009.

〈표 1-2〉 다문화가정 정의 관련 법적 규정(계속)

법적 규정	법령 항목	정의
결혼이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1] 28의4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 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결과 재구성. 2016년 3월 28일 15시 50분 접속.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liBgcolor1>

결혼이민자: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undefined>

결혼이민 :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80053&lsNm=%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Y>

3) 다문화가정 개념의 필요성

주지하다시피 수산정책은 어장·어항·어촌을 정책의 공간적 범위로 삼고 있다. 또한 어촌은 어촌계 등 어촌만이 가진 특수한 사회경제조직 및 고유한 문화가 있어 다른 어떤 곳보다도 공동체적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는 현장의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집단이나 구성원이 강조되는 다문화가족과는 달리 집단생활이 영위되는 공간임이 보다 강조되는 다문화가정 개념이 어촌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적합한 개념으로 보인다. 새삼스럽게 어촌의 경우를 말할 필요도 없이 어장과 어항 또한 단순히 수산물의 생산 장소와 어선정박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만나 정보와 문화를 교류하는 소통과 매개의 생활공간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의 공동체적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개념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용어를 사용한다.

4. 어촌 다문화가정

1) 어촌 다문화가정의 공간적·대상적 범위

여기에서는 어촌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정립을 시도한다. 정확한 개념 및 범위의 설정은 정확한 정책대상자로서의 어촌 다문화가정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태조사의 범위 및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어촌 다문화가정 개념은 어촌이라는 ‘정책 공간’과 다문화가정이라는 ‘정책 대상’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1) 정책 공간: 어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약칭: 수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촌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 읍·면의 전 지역 또는 동의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 정의¹²⁾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의 전 지역과 동의 지역 중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는 물리적 기준은 농촌과 어촌이 중복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물리적 근거는 정책 공간으로서의 어촌 개념을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 공간으로서의 어촌은 하천·호수·바다에 인접한 행정리 지역으로 거주민들이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정책 대상: 다문화가정

정책 대상으로의 다문화가정은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 준용 가능하다. 다문화가정 개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개념이며 기존의 다문화가족 개념이 담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담아내기 위해 연구 상에서 용어의 확장을 시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때 다문화가정의 정책 대상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 아동·청소년의 세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그러나 생활거주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더 큰 다문화가정 개념 및 공동체적 특수성을 가진 어촌의 특성을 고려할 때

¹²⁾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항. 법률(제13383호). 2015년 6월 22일 제정.

다문화가정의 정책 대상에는 어촌계 등 어촌의 주요한 조직을 포함시켜서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 대상으로서의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 아동·청소년, 어촌계¹³⁾를 말한다. 이밖에도 영주권을 가진 국내체류 외국인, 혼인관계가 해소된 결혼이민자, 어촌 거주 외국인부부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정형태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가치에 대한 이해는 어촌 미래를 대비한 효과적인 사회이동성 정책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2) 어촌 다문화가정의 개념

정책 공간과 정책 대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어촌 다문화가정의 정책대상은 하천·호수·바다에 인접한 행정리 지역에서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 아동·청소년, 어촌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때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아동·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정의를 따른다.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은 행정리 단위 혹은 어항을 중심으로 밀집·형성되는 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물때 등 어업 특성에서 비롯한 어촌 특유의 생활시간과 그에 근거한 노동방식 및 생활양식의 차이를 나타내기 힘들다. 때문에 농촌 다문화가정과 어촌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및 생활에 있어서의 차이를 드러내기 힘들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어촌 다문화가정은 어촌에 근거를 두고 주로 수산업과 관련해 생활하는 국적·민족·인종·문화 등의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이 한 명 이상 포함된 다문화가족 및 가족구성원 중 어촌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다문화가족이다. 그러나 어촌 다문화가정 일반에 대한 구체적 통계현황자료가 극히 미비한 실정이라 이에 관한 후속연구 및 정책수요로서의 어촌 다문화가정 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¹³⁾ 이때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어촌계)의 개념을 준용한다.

제2장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분석

제1절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분석

1. 다문화가정 관련 국외정책사례

1) 일본

일본 다문화가정 정책의 특징은 지자체에서 시작된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독자적 정책들이 국가정책 의제로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정주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시민단체, 재계 등으로부터 시작된 다문화사회로의 적극적 요구는 국가가 2006년 3월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전국적 규모로 마련¹⁴⁾하는 단초가 되었다.

다문화공생¹⁵⁾추진플랜은 정주 외국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부터 벗어난 대등한 공생관계로 설정하고 일상생활 영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각종의 행정서비스 지원을 완비함으로써 공존을 모색하는 이념지향을 보인다.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본은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다. 주요 시책은 크게 커뮤니케이션 지원, 생활 지원, 다문화공생 지역 만들기의 세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지원 부문에서는 언어 관련 정보 제공과 함께 지역 외국인을 상담원과 국제교류원 등으로 활용하거나 양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생활 지원 부문에서는 거주 관련 정보와

¹⁴⁾ 박대식·최경은,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¹⁵⁾ 박영준(2013)에 의하면 다문화공생이란 국적이나 민족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쌓아가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공생의 핵심은 바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박영준,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그 사례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통권 14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3.

입주 후의 원활한 생활 정착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자치 및 입주단지에 관한 상담이 해당된다. 다문화공생 지역 만들기 부문에서는 지역 개발과 다문화공생 거점 조성, 다문화공생 주제 교류이벤트 등의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은 무엇보다 공생을 위한 정주 외국인의 참여와 함께 외국인의 의사 반응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표 2-1〉 일본 다문화공생추진플랜 주요시책

구분	주요시책
커뮤니케이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미디어에 의한 행정·생활정보의 제공 - 외국인 주민의 생활 상담을 위한 창구 설치 및 전문가의 양성 - NPO 등 제후 통한 다언어 정보 제공 - 지역 외국인 주민의 상담원 등 활용 - JET 프로그램의 국제교류원(CIR)의 활용
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에 의한 거주 지원, 입주차별의 해소 - 주민 입주 후의 오리엔테이션의 실시 - 자치회 정(町)내회 중심 대처방안 추진 - 외국인 주민 입주단지 상담창구 설치
다문화공생 지역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기업, NPO 대상 다문화공생 지역 만들기 개발 - 학교, 도서관, 공민관 등 다문화공생 거점 만들기 - 다문화공생 주제 교류이벤트 개최

자료: 박영준,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그 사례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통권 14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3, pp. 261~266(재구성). 변수정,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2014.(중복)

2)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비교적 다문화 관련 정책을 이른 시기부터 추진한 나라이다. 이민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향상과 이민자 교육에 중점을 두어 이민자들이 사회와 융화될 수 있는 정책에 방향을 두고 있다.

2007년 제정된 시민통합법(Wet inburgering)은 네덜란드어와 네덜란드 사회에 대한 이해를 점진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이를 통과한 자에게만 시민권 내지 영주권을 획득할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급노동력을 갖춘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의 네덜란드 사회로의 통합을 꾀하였다¹⁶⁾.

특히 네덜란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과 함께 트래킹 시스템(tracking system)을 추진하여 만 4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보육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교육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표 2-2〉 네덜란드 트래킹 시스템 추진 경과

연도	추진 정책
2000년	-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한 교육 및 보육 특별 프로그램 운영 · 유아원을 통한 만 2~4세 영유아 특별프로그램 제공 · 초등학교를 통한 만 4~5세 유아 대상 특별프로그램 제공
2006년 8월	- 영유아를 위한 교육 및 보육 특별 프로그램 지방정부가 운영
2007년 3월	- 보육정책, 사회 및 고용부에서 교육·문화·과학부가 주관

자료: 김은영·문무경·김문희·박수연,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0, pp. 82~85. 2013년 연구 중복

3) 노르웨이¹⁷⁾

노르웨이는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선언한 적은 없어 직접적인 다문화가정 정책은 살펴보기 힘들지만,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 이민정책과 그에 대한 사회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해볼 수 있다.

노르웨이의 이민정책은 국가의 권한이 큰 것이 특징이다. 국가는 정책방향을 결정할 뿐 아니라,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각종 교부금의 전달에 대해 주요 책무를 가진다. 2010년부터 시행된 새이민법(The Immigration Law)은 이전의 이민정책에 비해 그 기준은 엄격해졌으나, 일단 유입된 이민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획하고 지자체가 그 운영을 담당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행하고 있다.

¹⁶⁾ 박대식·마상진·권인혜,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¹⁷⁾ 노르웨이의 다문화정책 사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유경·최현미·최소연·김가희,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3, pp. 112~113. 과 최승범·최현미·김춘미·김홍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지자체 역할 강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4, pp. 59~65.를 참조할 것.

4) 정책적 시사점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의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사례들에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사례에서 지자체로부터의 독자적 정책들이 국가정책 의제로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는 어촌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다문화가정 정책 발굴이 다문화가정 일반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필요성을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주 외국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대등한 공생관계로 설정하고 공존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결혼을 위해 어촌을 찾은 결혼이민자는 정주 외국인보다 더욱 어촌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역시 단순 지원의 성격을 넘어서 그들의 특징기를 살려 어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네덜란드 사례로부터 어촌의 결혼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지위 향상과 이민자 교육에 중점을 두는 정책방향을 배울 필요가 있다. 단순노동에의 취·창업뿐만 아니라 고학력의 결혼이민자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및 어업·수산업·어촌 관광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아동·청소년으로만 한정짓지 않고 영유아부터 교육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에게 어촌의 지속적인 정주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1) 국가

(1)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가. 개요 및 현황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이어 수립된 계획이다.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은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목표로 13개의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6대 영역 86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2-1> 제1·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비교

구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추진 기간	2010 ~ 2012년 (3년간)	2013 ~ 2017년 (5년간)
과제 구성	5대 영역 61개 세부과제	6대 영역 86개 세부과제
추진 기관	11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경찰청, 공정위, 여성가족부 및 국무총리실)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국방부, 복지부, 고용부, 외교부, 경찰청, 방통위, 법원, 여성가족부 및 국무총리실)

자료: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3, p. 27.

각 부처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한 개별 정책과제별로 참여하고 있다. 총 86개의 세부과제 중 가장 많은 정책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부처는 주관부서인 여성가족부로 총 56개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21개), 교육과학기술부(9개)의 순이다.

<표 2-3>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정책영역별로 참여하고 있는 정부 부처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많은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정책영역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총 10개의 부처가 정책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사

회경제적 진출 확대’로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총 9개의 부처가 정책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는 총 4개 영역, 5개의 과제로 구체적으로는 ‘3-3-4.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시 지원 확대’, ‘4-2-4. 기초 및 전문 영농교육 실시’, ‘4-3-3. 모국에서의 자격 인정 방안’, ‘5-3-4. 그 외 시설 종사자 이해 제고’, ‘6-2-3. 민간영역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다.

〈표 2-3〉 제2차 기본계획 부처별·정책영역별 참여과제 비교

구분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 가족 구현	다문화 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 이민자 사회 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 추진체계 정비
여성가족부	4	8	14	11	8	11
법무부	1	1	2	2	2	3
문화체육관광부	4	4	0	4	9	
보건복지부		1	1	2	2	
교육과학기술부		6			3	
농림수산물식품부			1	2	1	1
고용노동부				6		
행정안전부				5	1	
지방자치단체				2		1
경찰청				2	1	
방송통신위원회					2	
국방부					4	
국무총리실						1
법원						1
외교통상부						2

자료: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3. 재구성.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해양수산부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촌 다문화가정과 관련해 참여 가능한 정책과제를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참여 정책과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 가능하다. 현재 농림수산물식품부

의 참여 정책과제를 감안해 볼 때, 3-3-4, 4-3-3, 5-3-4, 6-2-3의 4개 정책과제는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도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 설정하고 있는 영역별 추진과제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표 2-4>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주요 내용

영역	정책과제	주요 내용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상대국과의 결혼시 상대국 제도·문화 교육 강화 ·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실시 · 다양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 추진 · 상대방 문화 존중을 위하여 교육내용 모니터링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 및 케이블 다문화방송 추진 · 쌍방향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확대 · 다양한 문화 공존에 대한 연구 및 홍보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정보 문해력 향상 ·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확대 · 이중언어교육 단계적 확대 ·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 지원
	한국어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공유 · 다문화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예비학교 전국 운영 · 자녀생활서비스 확대 · 초기적응 프로그램 'Rainbow School' 운영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향상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 · 진로·진학지도 강화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절차 안내 및 학교 진입 유도 · 각종 위원회 등에 다문화가족 청소년 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 CYS-Net에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 및 복지 포함
안정적인 가족 생활 기반 구축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 사증심사 강화 ·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검토 · 신상정보제공제도 정착화 · 국제결혼중개업 단속, 조사 강화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 양성·지원 · 다누리 콜센터 운영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서비스 종합안내지, 정보매거진 배포 · 다누리 운영 및 정보 제공

〈표 2-4〉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주요 내용(계속)

영역	정책과제	주요 내용
안정적인 가족 생활 기반 구축	소외계층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제도 수급현황 파악 · 정부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가족 차원의 돌봄서비스 지원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시 지원 확대
	피해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 중개업 피해예방 교육 및 상담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 및 상담언어서비스 확대 · 이주여성쉼터 단계적 확대 ·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내실화
결혼 이민자 사회 경제적 진출 확대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의 능력을 활용한 일자리 확대 ·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결혼이민자 참여 확대 · 사회적 기업 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및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훈련과정 확대, 자비부담 면제 ·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실시 · 징검다리 일자리 지원 · 기초 및 전문 영농교육 실시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십, 단체활동가 교육 실시 · 운전면허 학과교육을 통한 안전한 사회정착 지원 · 모국에서의 자격 인정 방안 마련 · 원격 교육프로그램 마련
	사회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과정에 결혼이민자 참여 확대 · 결혼이민자 참여 민간단체 지원 · 다문화가족의 자원봉사 활동 확대 · 자조모임 활성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인종·문화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금지법 제정 및 법·제도 개선 · 문화다양성 정책강화 법령 및 조항 마련 · 다문화수용성조사 정기적 실시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제작 관계자에 대한 안내서 제작·활용 · 다문화 관련 TV 프로그램 제작 지원 · 문화자원의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 홍보 · 일반국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 확대 · 문화다양성 교육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교육원에 다문화 교육과정·과목 개설 · 경찰 대상 다문화 이해 제고 · 다문화시설 종사자 이해 제고 · 그 외 시설 종사자 이해 제고

〈표 2-4〉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주요 내용(계속)

영역	정책과제	주요 내용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학생-다문화학생 간 상호이해 교육 강화 · 다문화 교육내용을 교과서에 반영 · 동영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쌍방향 교류·체험기회 확대 · 교원의 다문화 이해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 및 일반병사 대상 다문화교육 실시 · ‘다문화장병 차별행위 금지와 고충 우선처리’ 규정화 · 소수 종교자에 대한 배려 제공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병영체험 등 프로그램 실시
정책 추진 체계 정비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외국인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검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기발전방안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지표 정비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 및 배포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지자체의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확대 · 민간영역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대사 협의회 정례화, 관련국가와 정부간 양해각서 체결 · 주요대상국 가족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혼인, 이혼과정 상의 문제해결방안 모색 · 국가간 제도 모순 해결을 위한 양자간 협의 추진

자료: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3. 재구성.

나. 문제점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1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데 비해, 해양수산부는 현재 소관부처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어촌 다문화가정은 일반 다문화가정의 한 범주로만 인식되어 지리적 여건 등 어촌 특성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당시의 정책과제 역시 농촌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주택개량 등 단순 지원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방향 설정 및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2)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중앙부처)

가. 개요 및 현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은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목표와 과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2015년도 시행계획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미래인재 육성,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등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유사·중복 사업 조정 및 외국인-다문화 정책 연계 등을 정책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정책영역별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총 958억 원의 예산 중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45.7%)에 약 44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가장 많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24.1%)에 약 234억 8천만 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13.3%)에 약 13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각 부처의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순이다. 다만, 2015년 시행계획의 예산규모는 2014년 1,089억 원에서 958억 원으로 약 130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2014.01.15.)에 의거하여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의 조정, 다문화가족의 소득 및 가족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등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꾀한 결과로 대부분의 부처에서 예산이 감소¹⁸⁾하였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2-5>는 2015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상의 영역별·부처별 예산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2015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부처별 주요 사업내용은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저소득 취약계층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유일하게 어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8)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2015, p. 33.

〈표 2-5〉 2015년도 시행계획 영역별·부처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구분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성장 과발달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 에 대한 수용성제고
계	44,484	23,477	13,006	8,883	7,574
여성가족부	41,521	11,167	12,876	1,260	3,028
교육부	-	11,830	-	2,370	-
문화체육관광부	1,799	443	-	2,390	300
법무부	1,164	-	-	151	-
농림축산식품부	-	-	-	1,766	-
고용노동부	-	-	-	525	-
보건복지부	37	-	-	100	1,405
미래창조과학부	-	-	-	-	408
국방부	-	-	-	-	46
방송통신위원회	-	-	-	-	2,387
경찰청	-	-	-	321	-
농촌진흥청	-	-	130	-	-

자료: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2015. 재구성.

〈표 2-6〉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소관부처별 주요 사업내용

구분	주요 사업내용
여성 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교육 ·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확대(2015년 190개 이상) · 이중언어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이중언어 인재풀 구축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현지사전교육 확대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1577-1366) 운영 · 결혼이민여성 특화과정 프로그램 운영 및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 ·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 ·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 평가지표 반영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유치원 시범 운영 · 중도입국학생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집중이수 예비학교 확대 · 한국어교육과정 수정고시, 교과보조 교재 및 한국어 성취도 평가도구 개발·시행

〈표 2-6〉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소관부처별 주요 사업내용(계속)

구분	주요 사업내용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멘토링 운영방안 개선 · 이중언어, 수학·과학 등 분야 글로벌 브릿지 운영 대학 확대 · 일반학생 다문화 이해교육 및 다문화중점학교 확대 운영 · 교원 대상 다문화 학생 이해 제고 및 다문화학생 지도 관련 연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정책강화 법령 및 조항 마련 · 전국 17개 지역문화재단 무지개다리 사업 · 문화다양성 정책도구 활용 국내 현황 파악 · 대상별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 · 문화기반시설 쌍방향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제작 ·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보급, 한국어 교원 대상 연수 실시 ·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구축 · 문화다양성 체험 전시상자 및 학습자료 ‘다문화꾸러미’ 지속 개발·대여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 사증심사 강화 및 결혼중개업체 불법행위 적발 강화 · 결혼이민자 조기 적응프로그램 운영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저소득 취약계층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 결혼이민여성 정착단계별 영농교육 실시 · 지역농협 다문화가족 사업담당자 및 1:1 맞춤 농업교육 후견인(멘토)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 실시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결혼이민자 참여 지원 · 외국인주민 등 지원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 다문화가정 참여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지원 · 공무원교육원 다문화 인식 개선 관련 전문교육과정 개설·운영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주도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중앙부처 재정 지원·컨설팅 지원 · 결혼이민자 채용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알선 및 채용 사업주 인건비 지원 확대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서비스 민간 위탁 · 결혼이민자 취약계층 특화과정 확대 및 자비부담 면제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문진표, 결과통보서 등 관련 서식 번역본 제공 및 다국어 리플렛 제작 ·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 어린이집 교원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과정에 다문화가정 영유아보육 및 지원 내용 포함·교육 실시 · 취약보육 대상 위한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용 책자 어린이집 보급
미래창조과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친화적 방송통신서비스 확대

〈표 2-6〉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소관부처별 주요 사업내용(계속)

구분	주요 사업내용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관 및 간부 대상 교육 실시 및 장병 대상 부대교육 실시 · 다문화이해교육 군인 전문강사 양성 · ‘다문화장병 차별행위 금지 및 고충 우선처리’ 관련 각 군 규정 개정에 따른 보수교육 및 다문화교육 지속 · 다문화 관련 소수 종교자 활동여건 보장 · 부대개방 행사 및 각종 병영캠프에 다문화가정 초청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이혼 제도 차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 적극 모색 · 주요 국제결혼 상대국과 국제결혼 관련 문제 및 해결방안 논의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다문화가족 관련 TV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송 지원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운전면허 학과교육 · 경찰 대상 다문화 이해 제고 · 정착단계별 특성 고려한 맞춤형 예방치안 활동 전개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다문화가족 대상 다국어 번역 가능 상담시스템 운영 · 농촌 다문화공동체 활용, 통합·상호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보급 · ‘다누리 포털’과 ‘다문화가족 상담사랑방(농업진흥청)’ 연계

자료: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2015. 재구성.

나. 문제점

무엇보다 기본계획처럼 해양수산부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주요 사업에 있어서 어업 및 어촌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사업이 수립되지 못한다. 해양수산부가 참여하지 못하므로 인해 어업·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다문화가정의 여러 정책 욕구들이 정책으로 수렴될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하다. 뿐만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는 소관부처의 연계협력체계에 있어서도 해양수산부 및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이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2) 지자체¹⁹⁾

(1)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시도별)

가. 개요 및 현황

지자체도 매년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2015년도 지자체 시행계획에 따라 17개 시도는 6개 정책영역, 649개의 세부과제를 마련하고 총 5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2015년 지자체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분야별 사업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표 2-7〉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정책분야별 사업규모 현황

단위: 백만 원, %

정책 영역	과제 수	예산	비율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70	19,719.8	34.7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134	9,010.1	15.9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201	12,556.7	22.0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123	5,962.9	10.4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87	4,153.6	7.3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34	5,585.4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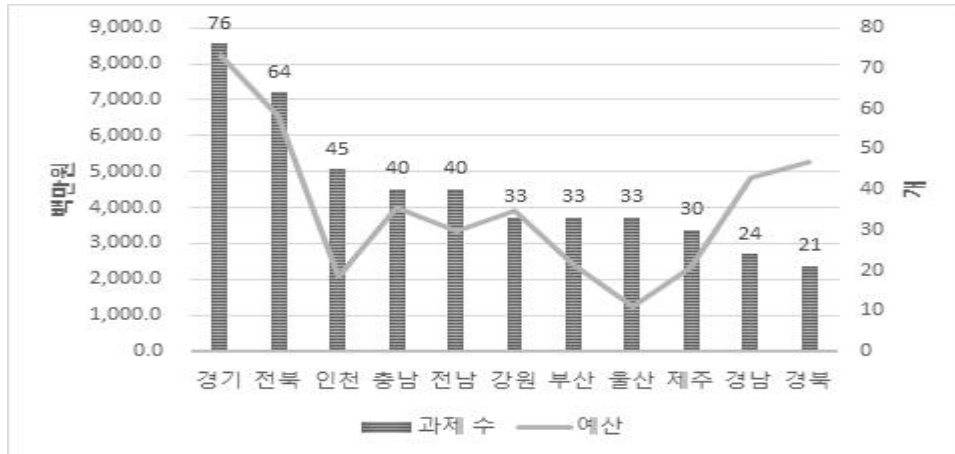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2015. 재구성.

각 지자체별 사업규모와 예산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총 76개 과제, 82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다. 경기도를 제외하고서는 과제 수에 있어서는 전라북도(64개), 인천광역시(45개), 충청남도과 전라남도(40개)의 순이었으며, 예산의 경우에는 전라북도(65억 2천 3백만 원), 경상북도(52억 7천 2백만 원), 경상남도(48억 4천 9백 5십만 원)의 순이었다. 예산 규모에 있어서 타 지방자치단체를 압도할 수밖에 없는 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했을 때 두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전라북도가 사업규모와 예산에서 수위를 차지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다문

¹⁹⁾ 본 연구에서 지자체는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전국의 연안시도·연안시군으로 한정하여 다루고 있다.

화가족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과제 수와 예산에 있어서, 도 단위가 시 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제 수에 비해 예산 투입의 비중이 크다.

〈그림 2-2〉 지자체별 사업규모 및 예산현황



주: 단, 예산의 규모는 지방비에 한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비 지원은 제외함

자료: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2015. 재구성

나. 문제점

지자체별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규모와 예산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역량, 의지에 따라 편차가 크다. 이는 지자체별 여건 및 역량과 의지에 의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 예산에 비해 과제 수가 적다는 점도 현장의 정책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더 필요함을 나타낸다. 때문에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발굴과 함께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필요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하고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2)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시군별)

가. 개요 및 현황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지방자치단체 2015년도 시행계획’(여성가족부, 2015)에 따라 각 시군은 도내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통과제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발굴한 특화과제를 실시한다. 여기서는 어촌 다문화가정을 정책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전국 연안시군의 특화과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실태를 간접적으로 점검한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총 8개 연안시도 및 연안시군의 2015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특화과제의 수는 122개로 이 중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화과제는 76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화과제의 수는 46개이다.

연안시도별 특화과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과제 수와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지자체들이 상대적으로 정책영역별 균형과 다양한 방식의 특화과제들을 발굴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별 편차가 있으나 과제들은 주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언어 교육, 모국방문 및 부모친지초청, 취업 창업 지원 등이 대부분이다.

제주도의 경우 ‘찾아가는 도서지역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다문화 출산가족 방문 건강관리’, ‘다문화가족 관광통역안내사 육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과제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연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표 2-8〉 연안시도별 특화과제

시도	특화과제	정책영역별 과제 수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다문화말하기 대회 ·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 테마가 있는 다문화가족 캠프 ·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1영역:
		2영역: 3개
		3영역: 4개

〈표 2-8〉 연안시도별 특화과제(계속)

시도	특화과제	정책영역별 과제 수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 ·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 다문화마을공동체 활성화 ·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 세계인의 날 행사 · 찾아가는 다문화소통프로그램 운영 	4영역: 4개
		5영역: 3개
		6영역: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사업 · 다문화가정 건강검진 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 지원 민간협력 추진 · 결혼이민자 외국어강사 양성과정 운영 · 다문화가족 강원열린한마음 이웃사촌 결연 · 외국인유학생 문화교류 축전 · 외국인유학생 강원도 명예홍보대사 위촉 	1영역: 3개
		2영역:
		3영역:
		4영역: 1개
		5영역: 3개
		6영역: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어울림사업 추진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 추진 · 친정부모 초청 또는 모국방문 지원 · 다문화가족 국제특송요금 지원 · 결혼이민자 자립강화를 위한 취업지원 ·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전개 · 시군 다문화사업 컨설팅 운영 지원 	1영역: 1개
		2영역: 1개
		3영역: 2개
		4영역: 1개
		5영역: 1개
		6영역: 1개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 이중언어 동아리 지원 · 다문화가정 행복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의 독서활동 지원 · 다문화가정 학부모상담실 운영 · 대학생 활용 다문화가정 자녀 1:1멘토링 운영 · 다문화가정 사랑방학교 운영 ·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 결혼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 다문화어울림 문화교육지원사업 ·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시장 개척 · 결혼이민자 학력취득 지원 · 결혼이민자 대학 학비 지원 · 다문화소식지 ‘사람들’ 발간 · 다문화가족 어울림축제 · 전북 다문화포럼 운영 	1영역: 4개
		2영역: 3개
		3영역: 5개
		4영역: 3개
		5영역: 2개
		6영역: 1개

〈표 2-8〉 연안시도별 특화과제(계속)

시도	특화과제	정책영역별 과제 수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의 인터넷요금 지원 · 다문화가족 종합안내 및 정보매거진 배포 	1영역:
		2영역:
		3영역: 2개
		4영역:
		5영역:
		6영역: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 운영 ·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다문화가족 SOS 긴급지원팀 운영 ·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 다문화청소년 레인보우 캠프 운영 · 다문화청소년 나라사랑 체험 교육 ·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사업 운영 	1영역:
		2영역:
		3영역: 3개
		4영역: 1개
		5영역: 2개
		6영역: 1개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향상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 · 진로, 진학지도 강화 · 입학절차 안내 및 학교 진입 유도 ·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지원사업&부부상담캠프 · 여성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 경상남도 다문화체험 교육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 특수시책 사업 추진 	1영역:
		2영역: 3개
		3영역: 1개
		4영역:
		5영역: 2개
		6영역: 1개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주여성 시민기자 운영 ·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및 친지초청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김만덕 해외봉사단 운영 · 중도입국 및 학교이탈자녀 교육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도서지역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 다문화 출산가족 방문 건강관리 ·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사업 · 다문화가족 관광통역안내사 육성 · 1366 이주여성쉼터 상담통역안내원 육성 ·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지원 사업 · 다문화가정 문화역사언어교육 지원 · 거주외국인 전통시장 이색카페 운영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명절맞이 전통문화 체험 · 다문화이해 초등학교교사 필수교직 이수과목 운영 	1영역: 3개
		2영역: 1개
		3영역: 3개
		4영역: 4개
		5영역: 3개
		6영역:

자료: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2015.
재구성

연안시군 특화과제를 살펴보면 시군별 특화과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을뿐더러 특화과제의 수와 내용이 한정적이다. 연안시군 특화과제의 내용은 주로 결혼이민자 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지원, 심리상담 및 멘토링제 등 초기적응지원, 합동결혼식비용 제공 등이 많다. 가족생활 기반 구축과 관련한 과제(3영역)와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4영역)의 관련과제들은 고르게 퍼져 있으나,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2영역) 관련과제는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서해 연안시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어 지역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발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9〉 연안시군별 특화과제

시도	시군	특화과제	정책영역
경기	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아동 심리정서 지원 · 다문화청소년 진로탐색 지원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영역: 3개 - 3영역: 1개
강원	삼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및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 미혼자 국제결혼 비용 지원 · 다문화주부 직업훈련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영역: 2개 - 4영역: 1개
	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 국제결혼 비용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반 · 다문화가족 사랑의 합창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영역: 1개 - 4영역: 1개 - 5영역: 1개
	강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여성 직업훈련교육 · 다문화합창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영역: 1개 - 5영역: 1개
	동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교실 · 다문화가족 기타교실 · 다문화가족 프리마켓 실시 · 다문화가족 작은음악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영역: 1개 - 5영역: 3개
	속초	· 리본공예, 운전면허, 다문화지도자 양성	- 4영역: 1개
	양양	· 결혼이민여성 일자리창출지원사업	- 4영역: 1개
	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정부모 초청 또는 모국방문 지원 · 다문화가족 국제특송요금 지원 	- 3영역: 2개
충남	보령	·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사업	- 3영역: 1개

〈표 2-9〉 연안시군별 특화과제(계속)

시도	시군	특화과제	정책영역
전북	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자녀학습도우미 키봇 지원 · 한국어교육 거점센터 운영 · 다문화가정 결혼식 대행 · 다문화가정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영역: 2개 - 3영역: 2개
	고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 · 초기입국자 요리 교실 · 결혼이주여성 코디네이터 운영 · 다문화누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영역: 1개 - 3영역: 3개 - 5영역: 1개
전남	완도	·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및 친정부모 초청	- 1영역: 1개
	신안	·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및 친정부모 초청	- 1영역: 1개
	여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다문화도서관 운영) · 한국생활 초기적응 지원(작은 다문화학교 운영) · 다문화카페 나눔 운영 · 다문화월드페스티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영역: 1개 - 3영역: 1개 - 4영역: 1개 - 5영역: 1개
	광양	·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확대	- 1영역: 1개
	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멘토링제 운영 ·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지원 	- 3영역: 2개
	장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멘토링제 운영 · 토요일시장 다문화음식거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영역: 1개 - 4영역: 1개
	함평	· 시부모멘토링 황소골 우면파워	- 3영역: 1개
	목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세계인의 날 행사 등 어울 한마당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영역: 1개 - 5영역: 1개
	해남	· 다문화가족 심리치료 및 위기가정 사례관리	- 3영역: 1개
	영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톨레샵협동조합 운영 ·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영역: 1개 - 5영역: 1개
경북	포항	· 다문화가족 문화활동 지원	- 4영역: 1개

자료: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2015. 재구성

나. 문제점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이라는 특화과제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화과제의 콘텐츠에서 차별화가 부족하다. 이는 전국적인 실태조사 등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지역 여건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이 부족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 사업의 추진주체가 시도에서 시군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 경우가 많아 일선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 새로운 정책 발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시도 단위의 특화과제가 시군 단위의 특화과제 수보다 더 많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예산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군 단위의 현장밀착형 과제들이 발굴되기 어려운 체계상의 문제점이 존재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연안시군별 특화과제에서 지역별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 역시 물때 등 어업여건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장시간 노동시간을 가진 어촌 다문화가정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의 생활 및 학습관리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 및 정책 발굴이 예상된다.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개요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및 목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국비지원 사업의 특성을 가지나, 실제 운영은 각 지자체에서 직영 운영하거나 민간에 수탁,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 사회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자조모임 육성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 및 지원²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 1인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²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안내 > 가족 > 다문화가족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참조.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4_02.jsp 2016년 3월 24일 11시 15분 접속.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의 알선, 통번역 지원 사업, 그 밖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의 사업영역을 센터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두고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본 프로그램은 <표 2-10>과 같다.

〈표 2-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 프로그램

사업영역	내용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 언어 환경조성 프로그램 · 가족의사소통 프로그램 ·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 결혼과 가족의 이해 · 가족의 의미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교육 · 부모-자녀관계 및 자긍심향상프로그램 · 자녀교육 프로그램 · 부모역할교육, 자녀건강지도 · 자녀생활지도 등
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부부교육 · 배우자이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배우자교육 프로그램 · 부부갈등해결 프로그램 등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이해 교육 ·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 이주민과 인권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기초소양 교육 · 구직자 발굴 및 구직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일센터, 고용센터 등 취업관련기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소양교육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활동 · 한국사회 적응 교육 · 소비자·경제 교육 · 학업지원반(검정고시반) 운영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다문화인식 개선 · 결혼이민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미래 찾기, 길찾기 등 미래설계 프로그램 중 선택)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상담 · 개인상담, 집단상담 · 사례관리, 심리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가족 긴급지원 · 외부상담기관 연계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안내 > 가족 > 다문화가족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참조: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4_02.jsp 2016년 3월 24일 13시 06분 접속.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진체계²¹⁾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각 시군구는 위탁 및 협조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거점센터는 2015년 현재 16개 광역 시도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거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주체별 기능을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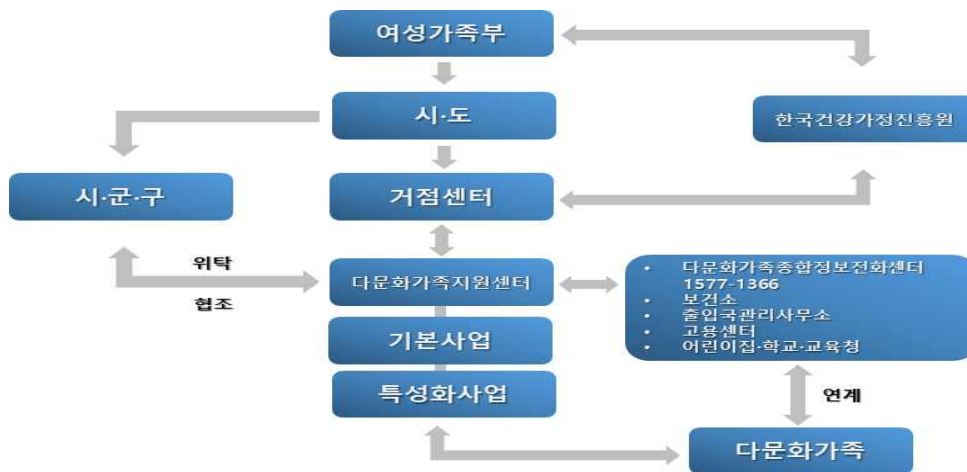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중앙 관리 사업으로 신규 사업개발 및 교재 제작·배포, 인적자원의 역량강화교육, 센터지원 및 평가, 전국센터의 협력체계 구축, 자원연계 및 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 사업지원 및 평가, 슈퍼비전 및 평가분석, 자원연계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정보 제공 사업으로 Rainbow+ 발간,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콘텐츠 제작, 다누리 서포터즈 운영, 다누리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넷째 인식 개선 사업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인력풀 구축과 실적 관리, 다문화 이해교육과정 운영 및 MOU기관 교육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우수사례 보고회,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워크숍,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컨설팅 및 현장지원, 지역다문화프로그램 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누리 콜센터(1577-1366)를 통해 종합정보 제공 및 생활통역지원, 실무매뉴얼 수정 및 개발, 전화상담원 양성 및 심화교육, 상담원 직무성과평가 및 서비스만족도조사, 홍보 및 기관 네트워크, 국제결혼피해 상담전화 등을 운영하고 있다.

거점센터는 특성화 사업으로 시·도별 특성에 맞추어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권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지원을 수행하며 관리 업무로 직원 및 방문교육지도사 교육을 실시하고 센터 운영지원 및 현장을 점검한다. 또한 상담 슈퍼비전/사례관리 슈퍼비전 및 만족도조사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업무로 중앙관리기관과 센터와의 연계, 권역 내 센터·관련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하고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진체계별 역할 및 주요 사업내용은 여성가족부, 『20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결과보고서 I』, 2014. pp. 5-6을 참조하였음.

지역 시군구별로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각 시도 단위의 거점센터와 협조체계를 갖추고 기본사업 및 특성화사업들을 다문화가족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필요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보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어린이집, 학교, 교육청 등의 유관기관과 다문화가족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2-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체계



자료: 여성가족부, 『20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결과보고서 I』, 2014. p. 4. 재구성.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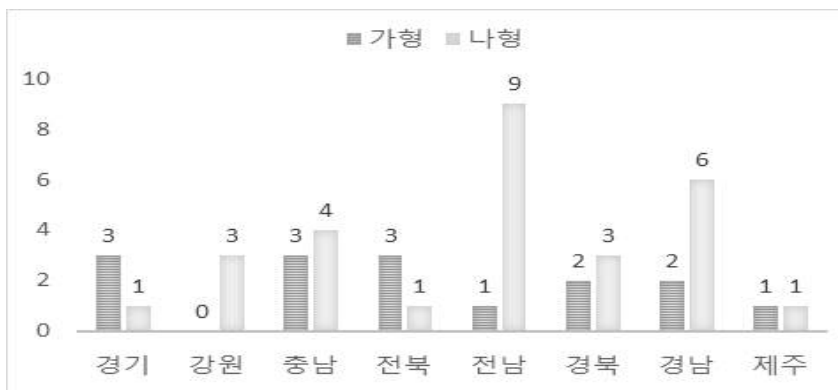
가. 시도별 설치현황

전국 연안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8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²²⁾. 연안시도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라남도(15개소), 경상남도(8개소), 충청남도(7개소)의 수준이다. 분석대상 48개소 중 10개소가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²²⁾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6년 3월 현재 전국 218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운영현황에 대한 결과분석은 2014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결과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참고하였으며, 관련 통계 결과는 어촌이 인접한 전국 연안시군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임

나머지는 민간 수탁·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의 대다수는 종교단체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센터의 이용실적, 관할지역 결혼이민자 및 자녀수에 따라 ‘가형’과 ‘나형’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센터 이용실적 70%(센터 이용 결혼이민자 실인원의 50%, 연인원의 20%), 관할지역 결혼이민자 및 자녀수 30%가 차등지원의 기준이 된다. 지원금은 2014년 현재 ‘가형’이 1억 4천 8백만 원이며, ‘나형’이 1억 1천 8백만 원이다. 연안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가형은 15개소, 나형은 33개소이다.

〈그림 2-4〉 연안시도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형태별 설치현황



자료: 여성가족부, 『20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결과보고서 I』, 2014. pp.6~13. 재구성.

나. 이용현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사업은 집합교육, 방문교육서비스,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상담을 포함하는 기본사업과 자조모임, 봉사단 운영, 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포함하는 홍보 등 운영사업으로 구분된다.

연안시군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8개소를 대상으로 했을 때 2014년 연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총 연인원은 230,058명에 달한다. 이중 연인원이 가장 많은 센터는 전라북도 김제(17,419명), 전라북도 부안(12,295명), 경기도 시흥(11,74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센터 사업 중 가장 많은 연인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통합교육(133,074명)으로 전체 연인원의 57.8%

에 달한다.

기본사업에서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의 경우 연인원이 가장 많은 센터는 전라북도 김제(12,268명), 전라남도 함평(8,306명), 전라북도 고창(8,27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연인원이 가장 많은 센터는 경상북도 포항(2,745명), 전라북도 김제(2,691명), 충청남도 서천(2,50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사업의 경우 연인원이 가장 많은 센터는 경기도 시흥(837명), 전라남도 순천(726명), 경상남도 고성(69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홍보 등 운영 사업에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의 경우 연인원이 가장 많은 센터는 충청남도 당진(3,424명), 경기도 시흥(2,971명), 전라북도 부안(2,47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의 경우 연인원이 가장 많은 센터는 전라남도 여수(1,948명), 경상북도 포항(1,269명), 충청남도 당진(97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전라북도와 서해 지역이 센터 이용이 활발하며, 남해 지역이 센터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연인원 상·하위 3순위 지역

단위: 명

상위 3순위	연인원	기본사업			홍보 등 운영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상담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1	김제 (17,419)	김제 (12,268)	포항 (2,745)	시흥 (837)	당진 (3,424)	여수 (1,948)
2	부안 (12,295)	함평 (8,306)	김제 (2,691)	순천 (726)	시흥 (2,971)	포항 (1,269)
3	시흥 (11,744)	고창 (8,277)	서천 (2,507)	경남 고성 (690)	부안 (2,472)	당진 (971)
하위 3순위	연인원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상담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1	하동 (683)	울릉 (207)	하동 (18)	울릉 (0)	속초 (33)	서천 (0)
2	울릉 (707)	하동 (313)	영광 (44)	영광 (81)	여수 (74)	하동 (0)
3	진도 (1,506)	고흥 (622)	동해 (104)	해남 (86)	장흥 (75)	광양 (53)

자료: 여성가족부, 『20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결과보고서 I』, 2014. pp.24~29. 재구성.

제2절 다문화가정 관련 법제도 분석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및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2-12〉 외국인 및 이민자 적용 법령

관계법령	주요 내용
· 헌법, 근로기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외국인 지위보장 및 국적에 의한 차별금지
· 국적법,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 및 체류자격 규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처우에 관한 규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주노동자에 관한 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불법체류자 미성년 자녀에 관한 교육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해외이주법	국내방문재외동포, 외국거주재외동포, 한국민의 해외이주에 관한 규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새터민의 정착과 사회통합 관련 규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관계법’ 검색결과 재구성. 2016년 3월 25일 9시 30분 접속.
<http://www.law.go.kr/main.html>

이 가운데 다문화가정과 가장 관계있는 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법무부가 주관하며 역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 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법을 통해 다문화가정 관련법의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1) 개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기 위해 2008년 3월 21일 제정되었으며,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특징

특징은 법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가족을 법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외국인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한정짓지 않고, 결혼이민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가족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명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표 2-13>과 같다.

〈표 2-1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제6조) ·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제7조)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8조) ·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제9조) · 아동·청소년 보호·교육에 관한 지원(제10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법’ 검색결과 재구성. 2016년 3월 25일 11시 44분 접속.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undefined>

3) 문제점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대상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 아동·청소년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의 내용은 대부분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별 지원이 대다수이다. 그나마도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관한 규정과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졌다. 다문화가정의 법적 정책대상을 결혼이민자로 한정하게 되면서 결혼이민자와 그의 자녀 외 가족구성원은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 개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헌법상의 외국인 규정²³⁾에 대한 구체화를 시도한 것이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년 2월 10일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특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²⁴⁾과 세계인의 날²⁵⁾을 명시하고 있

23) 「헌법」 제6조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를 일컬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 헌법’ 검색결과. 2016년 3월 28일 14시 34분 접속.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undefined>

2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검색결과. 2016년 3월 28일 14시 37분 접속.

어 다문화가정 관련 규정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표 2-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역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와 같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표 2-1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재한외국인 처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한외국인 등의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제10조) · 재한외국인의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제11조) ·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제12조) · 영주권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제13조) · 난민인정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제14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8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검색결과 재구성. 2016년 3월 25일 15시 40분 접속.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undefined>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undefined>

- 2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검색결과. 2016년 3월 28일 14시 38분 접속.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undefined>

3) 문제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재한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규정하는데, 이때 재한외국인은 거주를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여야 한다. 이는 다문화가정 중 거주를 목적으로 이민을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체류하게 된 이들이 재한외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결국 결혼이민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제3절 문제점 및 시사점

1.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 정책 검토

1) 문제점 및 한계

□ 해양수산부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1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는 현재까지 소관부처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부처로 참여하며 농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어촌 다문화가정은 농촌 다문화가정의 한 범주로만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관심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 어촌 다문화가정이 농촌 다문화가정의 한 형태로 인식됨

어업여건, 물때, 어촌공동체의 특성 등 어촌은 농촌과는 다른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도 어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어촌 다문화가정은 농촌 다문화가정의 한 형태로만 인식되어 다문화가정 정책이 농촌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지역별·지자체별로 다문화가정 정책이 천차만별임

지자체별 다문화가정 사업규모 및 예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관심과 역량, 의지 또한 편차가 크다.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고, 현장의 정책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과제가 부족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센터 프로그램 이용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 지역 및 어촌 여건에 부합하는 특화과제의 부족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은 특화과제의 목적임에도 지역별 내용은 특색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역 여건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특화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물때 등 어업여건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장시간 노동 등은 어촌 다문화가정의 노동 및 일상생활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어렵게 하는 여건들이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 과다

다문화가정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책들이 지자체 단위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센터의 업무과다가 우려된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기보다는 연계협력체계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수협 등을 이용한 사업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시사점

□ 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방향 설정 및 정책 발굴이 필요함

다문화가정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책들이 지자체 단위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센터의 업무과다가 우려된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기보다는 연계협력체계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수협 등을 이용한 사업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

해양수산부가 참여함으로써 어업·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다문화가정의 여러 정책 욕구들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해양수산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기본계획 등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과 계획에서의 적극적 참여 및 타 부처와의 연계협력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이끌어 어촌 다문화가정의 정책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 필요가 있다.

□ 구체적 실태 파악을 위한 어촌 다문화가정 데이터베이스 마련 필요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는 극히 미비하여 그들의 삶의 실태는 고사하고 정책대상자로서의 어촌 다문화가정의 범위조차 산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참여를 통해 관련 통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어촌 다문화가정에 관한 실효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마련을 위한 각종의 조사·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상범위를 산정하고 구체적인 삶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량적 데이터의 수집에만 그치지 않고 결혼이민자의 적성·역량 등에 관한 정성적 데이터의 수집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단순지원 성격을 넘어선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필요

초기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순지원 성격의 정책 사업을 넘어 결혼이민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재능을 수산·어촌의 발달과 연계할 수 있는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고민하여 기존 다문화가정 정책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수립의 당위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2.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 법제 검토

1) 문제점

- 다문화가족 구성원 개별지원으로 다문화가정 및 어촌공동체를 연계한 다문화 가정 정책 지원이 어려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부분의 지원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개별지원을 전제로 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법적 정책대상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제외한 가족구성원은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어촌 다문화가정은 어촌계 등 어촌공동체 중심의 문화가 존재하여 개별지원으로는 실효성 있는 다문화가정 정책 수립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 여성 결혼이민자 중심의 법제 문제

여성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으로 상대적으로 남성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정책과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밖에 도 외국인선원이나 혼인하지 않은 기타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가진 다문화가정 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시사점

- 다문화가족에서 다문화가정으로 인식 전환을 통한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접근 필요

어촌 특성 및 특유의 공동체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족 개념을 넘어서서 생활이 영위되는 공간으로서의 가정으로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각 전환과 함께 다문화가정의 정책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이끌 수 있다.

-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관련법 체계 검토 필요

다양한 여건 변화와 정책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수행에 필요한

관련법 체계의 유기적인 검토와 함께 필요한 경우 법적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어촌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검토 및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

제3장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분석

제1절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분석 개요

1.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분석의 개요

어촌 다문화가정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수요의 파악과 함께 현장의 정책대상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정이 현재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어촌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에 대한 현장 인터뷰, 어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계 전문가와의 집단면접을 통해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방향 및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사례 분석에서는 어촌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들과의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기초적인 정책 욕구 및 생활실태에 대한 파악을 진행하였다.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 설문조사에서는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에 대한 통계적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소속된 어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어촌 생활의 어려움, 필요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이용 등을 물었으며,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는 현장사례 분석을 통해 수집된 정성적 자료와 함께 분석하여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및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실태 및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지원 실태 등을 물었다.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방향 심층분석에서는 전문가와의 집단면접을 통해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표 3-1〉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분석 및 분석대상

실태분석	분석대상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사례 분석	어촌 다문화가정(6개 지역, 18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6개 지역)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 설문조사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소속 어촌 다문화가정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지자체 다문화 담당공무원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방향 심층분석	중앙부처&지자체&연구소&관련단체

2.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수요 추정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수요의 파악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정확한 어촌 다문화가정의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자료가 없어 부득불 관련 자료를 통해 정책수요를 추정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어촌 다문화가정 추정값을 구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였다. 첫째,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연안시군의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수를 산출하고 전국 연안시군의 전체가구 및 인구 대비 어가 및 어가인구의 평균비율을 통해 어촌 다문화가정의 추정값을 구하는 것이다. 둘째, 제4절에서 실시한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 연안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관리되고 있는 다문화가구 중 종사 직종이 어업이거나 반농반어인 가구 수를 구해 추정값을 산출하는 것이다.

1)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추정

정확한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대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을 시도하였다. 2015년 인구총조사의 시군구별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자료로부터 광역시를 제외한 연안시군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표 3-2〉 연안시군 목록

연안시군 목록
평택, 안산, 시흥, 김포, 화성(이상 경기도),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이상 강원도), 보령, 아산,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이상 충청남도), 군산, 김제, 고창, 부안(이상 전라북도), 목포,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이상 전라남도),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이상 경상북도), 통영, 사천, 거제, 창원, 고성, 남해, 하동(이상 경상남도), 제주, 서귀포(이상 제주도)

이때 다문화가구는 65,705가구, 결혼이민자는 199,014명이다. 그러나 연안시군의 다문화가구를 어촌 다문화가정과 등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연안시군의 전체 가구 수 및 어가 수, 전체 인구 및 어가 인구를 추출하여 비율에 따라 어촌 다문화가정의 정책대상 수요를 추출하였다.

해당 연안시군의 2015년 총 가구 수는 3,560,580가구, 총 인구는 9,226,696명이며, 당해 어가 수는 49,430가구, 어가 인구는 115,015명으로 가구 대비 어가 비율은 1.39%, 인구 대비 어가인구 비율은 1.25%이다. 또한 전체 가구 대비 다문화가구 비율은 1.85%, 인구 대비 다문화인구 비율은 2.16%이다. 따라서 이 비율에 근거하여 어촌 다문화가정의 추정값을 산출해보면 어촌 다문화가정의 정책수요는 914.5가구, 2484.3명이 나오게 된다.

〈표 3-3〉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수요 추정값(인구총조사 활용)

단위: 가구, 명, %		
구분	다문화가구	다문화가족
전체	3,560,580	9,226,696
어가	49,430	115,015
다문화	65,705	199,014
어가 비율	1.39	1.25
다문화 비율	1.85	2.16
추정값	914.5	2484.3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그러나 이때의 추정값은 수산업 일반에 종사하고 있는 어촌 다문화가정의 개념을 포함시키지 못하여 실제 어촌 다문화가정의 수요보다 현저히 작은 값이 산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추정

제4절에서 다뤄질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는 전국 연안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항목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총 다문화가구 수와 특성을 묻는 항목이 있어 이를 통해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수요의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가구 특성 항목은 농가, 반농반어, 어가, 도시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53개 연안시군에 소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총 다문화가구 수는 37,645가구이며, 가구 특성 항목별로는 농가 12,822가구, 반농반어 3,655가구, 어가 4,649가구, 도시 16,041가구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구 추정치는 반농반어 가구와 어가를 합한 8,304가구이며, 4인 가족 기준 33,214명이다.

〈표 3-4〉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수요 추정값(정책 설문조사 활용)

단위: 가구, 명

구분	다문화가구	다문화가족(4인 가족 기준)
전체	37,645	-
농가	12,822	-
반농반어	3,655	-
어가	4,649	-
도시	16,041	-
추정값	8,304	33,214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

제2절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분석

1.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사례 분석

1)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사례 개요

□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사례의 목적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현장사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최근까지의 연구에 있어 어촌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은 이루어져 왔으나 어촌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어촌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구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은 정책의 형성자, 정책의 전달자, 그리고 정책의 수혜자로 이어지는 정책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정책의 일련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어촌 다문화가정 등 정책 서비스 전달자와 수혜자에 대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어촌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사례 지역 선정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조사를 위해 먼저 연안시군을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동, 서, 남해안의 해역별로 가장 이용자가 많은 지역 3순위와 가장 이용자가 적은 지역 3순위를 파악하였다.

해역 특성에 따른 어촌 형태를 반영하고자 동해, 서해, 남해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빈도를 기준으로 상위 지역 3곳과 하위 지역 3곳을 대상군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역 담당공무원의 협조가 가능한 6곳의 지역을 선정하였다.

〈표 3-5〉 해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현황

단위: 명

해역	서해(23개)	남해(15개)	동해(7개)
총 이용자수	145,598	46,947	24,277
평균 이용자수	6,066.6	3,129.8	3,468.1
평균 근사 시군	군산(7,151) 화성(4,686) 서산(7,464)	광양(3,118) 보성(2,914) 거제(3,391)	영덕(3,455) 경주(3,990)
상위 3개 시군	시흥(11,744) 당진(11,478) 고창(11,134)	고성(5,569) 사천(5,264) 순천(5,134)	포항(5,675) 강릉(4,544)
하위 3개 시군	진도(1,506) 보령(1,833) 김포(1,989)	해남(2,117) 장흥(2,127) 완도(2,210)	속초(2,012) 동해(2,289) 울진(2,312)

주: 광역시도 제외. 연안시군 중 2014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과보고서 기록 없는 연안시군 제외됨(전남 신안, 강원 삼척, 강원 고성)

자료: 여성가족부, 『20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결과보고서 I』, 2014, 재구성.

□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사례 조사 지역

서해는 상위지역으로 고창군, 하위지역으로는 보령시를 선정하였으며, 남해는 상위지역으로 사천시, 하위지역으로 장흥을 선정, 동해는 상위지역으로 포항시, 하위지역으로 울진군을 선정하였다.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사례 조사는 먼저 해당 시군의 담당공무원 및 다문화가정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의 특성 및 운영관련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지역의 어촌을 방문하여 어촌 다문화가정 2~4곳을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3-6〉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사례 조사 지역

서해	남해	동해
고창(사례 2곳)	사천(사례 2곳)	포항(사례 3곳)
보령(사례 3곳)	장흥(사례 3곳)	울진(사례 3곳)

□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사례 면접지침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조사를 위한 면접지침은 총 4가지 요소로 어촌생활 적응을 우선시 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인 어촌생활의 모습과 어업형태, 자조모임을 위주로 질문하였다.

문화적 차이 분석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나 해결방안 등을 위주로 질문하였다.

자녀양육은 자녀 돌봄과 관련한 서비스 혜택 및 자녀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하였으며, 교육 및 취업은 결혼이민자의 교육 및 취업 등으로 세부내용을 구분하여 면접 시 이용하였다.

〈표 3-7〉 다문화가정 면접조사 면접지침

면접 지침 내용
- 입국 이후의 한국 및 어촌생활 적응
- 어촌생활 적응을 위한 개인적 노력
- 어촌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움
- 각종 자조모임 관련 활동 인지 및 참여 여부
- 생활고민에 있어서의 상담자
- 어촌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
-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
-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
-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받은 서비스
- 서비스에 대한 평가
-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문제점, 필요한 지원
- 교육 및 취업 관련 서비스 경험 여부
- 서비스는 도움이 되었는가?
- 직장경험? 취업경험? 취업의향?
- 어촌 관련 교육 및 취업이 있다면?

2) 어촌 다문화가정 사례분석

(1) 고창군 다문화가정 사례

□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공무원 면담

고창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한국어 전문교육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단계별 한국어 교육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의 국적 취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나오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거점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야간반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고창군의 어촌 다문화가정은 김 양식, 바지락 채취로 농업에 비해 소득이 비교적 많아 경제적 안정성은 농업에 비해 높으나, 노동의 강도가 강하며 노동시간으로 인한 자녀교육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적별 생활방식의 차이 및 자녀교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자녀 관리가 소홀한 것이 어촌 다문화가정에 주로 나타나고 있어 어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함을 알 수 있으며 중학생 이상의 자녀는 학교 내 차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2016년 1월 마을기업을 오픈하여 6차 산업화 사업비 지원(장어 뼈 쿠키+복분자)으로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하는 다문화가정이 있으며 특히 일본,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가 활동적이었다.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등에 관한 주민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지역 사회의 인식개선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예산 및 인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다문화축구단,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 고창군 다문화가정 사례 1

고창군에서 방문한 첫 번째 어촌 다문화가정은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로 가공공장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고창군 하전마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해안가에 가까운 공장 부지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결

혼이민자는 중국인이기는 하지만 의사소통에 문제점은 없었다.

결혼이민자는 중국출신이며 배우자와 함께 바지락 가공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실제 사업은 결혼이민자가 운영하고 있었다. 수산물 관련 사업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장벽이 높아 사업 운영 초반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사업관련 상담 및 사업 공지 등에 있어서 정보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사업을 원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통로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 사업장에는 다문화가정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13~4명이 현재 읍내에서 자조모임을 하고 있다.

부모님들이 센터나 시내로 나가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과거 결혼이민자들의 많은 가출 사례가 좋지 않은 인식으로 굳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의 사회 단절화 현상을 낳는 한편 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며 언어 습득 속도를 늦추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경제력이 낮은 경우 결혼이민자들의 경제력에 기대는 경우가 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방치되는 현상이 있으며 학습부진 등 자녀관리가 잘 안 되며, 학교 부적응이 심화된다. 시골, 학급 수, 소득 등에 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을 통해 확인하여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고창군 다문화가정 사례 2

고창군에서 방문한 두 번째 어촌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자격 시험으로 인하여 배우자만 심원면 사무소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배우자는 고창다문화가족협회장으로 다문화가족의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역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과소평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결혼이민자는 베트남 출신이며 배우자는 소금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고창다문화가족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도 결혼 이후 아들(6세), 딸(7세)이 있

으며 배우자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배우자는 고창 다문화가족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고창군 다문화가족협의회는 100여 명(50명 정회원+50명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발족하였다.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문제로 언어 소통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주 초기에는 통번역 등의 대화 및 부부관계 해소를 위한 방문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며 한국어능력 시험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어린 자녀의 양육에 있어 작업 시간대별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도시에 비해서 시골이라 다문화가정의 구성비율이 높아 심원면의 초등학교 경우는 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 내 다문화가정 자녀 차별에 대한 부담은 비교적 적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족관계에서는 결혼이민자의 모국으로의 송금 문제가 나타나는데, 결혼정보업체의 거짓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사업체 보조 등 융자 지원도 필요하다.

(2) 보령시 다문화가정 사례

□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공무원 면담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세군 법인으로 운영되며 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보령시에는 640명의 다문화인이 있으며 어촌 다문화가정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어촌 다문화가정의 경우 원산도 5가구로 반농반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지리적 접근성에 의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결혼이민자 중 고학력자들은 대부분 일본 통일교 출신이며, 이중 언어 환경 조성사업은 통번역서비스, 베트남 통역의뢰 등이 있으며 동남아 출신의 결혼이민자의 학력은 대체로 중졸이하로 파악되었으며 자격증, 진학상담, 장학혜택

소개도 있지만, 실제 여력이 없어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10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4-5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비율로 학교 진학률이 매우 낮은 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학부모교육(1년 사업)을 진행하여 학교와 적응할 수 있는 방식을 강의하기도 하나 보다 근본적인 자녀 교육과 관련된 정책적 대안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한글교육, TOEIC반, 축제행사 참여, 바리스타 교육, 운전면허 취득 등이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예산의 중복성 문제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한글 관련 교육사업 역시 인건비 차이로 센터가 아닌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실정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보령시 다문화가정 사례 1

보령시에서 방문한 첫 번째 어촌 다문화가정은 대천항 소형선박 선주협회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배우자 없이 보령시 공무원과 동참하여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인터뷰하였는데 작업장은 대천항 한쪽의 공터에 소형선박 선주들의 조업을 위한 작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작업공간은 바닥이 포장되어 있지 않고 배수가 되지 않아 악취가 풍기는 등 환경이 열악하였다.

결혼이민자는 중국 연변 출신이며 44세로 한국 거주 18년 되어 있으며 취업을 위해 입국 이후 1년째 결혼 했으며 자녀가 1명 있다. 배우자는 55세로 어선 어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꽃게 자망(연안자망)을 하고 있다.

초기에는 같이 조업을 하다가 멀미로 인하여 지금은 주로 그물 추리기, 고동 손질 등 조업과 관련하여 육지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다. 조업에 있어서는 주로 일당제로 어선원을 쓰고 있으며 어장이 비교적 작아 봄, 가을로 몇천만 원 정도의 연소득을 가진다.

다문화모임은 시간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자녀(11세)를 학교 보내고 하우스에서 소형선박 어구손질로 하루 일과를 보내며 집에 오면 7-8시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소형선박선주협회 소속으로 다문화가정 5가구가 있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자주 모임을 가지고 있다.

결혼 초기 음식문화에 있어 한국 음식문화가 맞지 않아 힘들었으나 현재는 많이 적응하였다. 모국음식은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2010년 수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국방문 지원 사업 경험이 있으며 지원은 항공료와 여비 50만원을 지원받아 가족 3명이 친정을 방문하였다. 친정식구(언니, 형부)를 초청해 현재 한국 거주 중으로 언니는 모텔에서 근무 중이다.

낮에는 주로 혼자서 조업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자녀는 아침에는 걸어서 등교하며, 저녁에는 학원차를 타고 하교한다.

이주 초기에 복지관과 센터에 등록했으나, 조업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이후에는 어민으로써 협회 소속으로 같이 어울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 보령시 다문화가정 사례 2

보령시에서 방문한 두 번째 어촌 다문화가정은 대천항 소형선박 선주협회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배우자 없이 보령시 공무원과 동참하여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한국 거주가 오래되어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더불어 어업인으로서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이민자는 59세 중국 출신으로 중국에서 결혼 이후 입국하였으며 재혼 가정으로 딸은 중국에서 같이 왔으며 전처의 아들이 4명이 있다. 배우자는 69세로 어선어업으로 낚지 통발을 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는 어업관련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

어촌생활 경험이 없어 어촌적응이 힘들었으나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비교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모국방문 경험이나 다문화센터 방문 경험이 없으며 입국이 오래 되어 모국 방문 등에 지원하기 어렵다.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보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다양한 지원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자녀와 같이 들어왔으며 현재 자녀는 다문화가정협의회를 만들어 다문화가정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협의회를 찾아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달리 보령시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존에는 다문화가정협의회에 지원되는 경비로 다양한 사업을 하였으나 현재는 다문화가정협의회 사무실을 이전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다문화가정협의회원들과 소득사업을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쓸 예정이다.

□ 보령시 다문화가정 사례 3

보령시에서 방문한 세 번째 어촌 다문화가정은 소형선박 선주들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초반에는 주변에 다수의 다문화인과 배우자들이 있었으며 사례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과의 관계는 매우 좋아 보였다. 다만 사례가정의 배우자와 결혼이민자의 관계에 있어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의 눈치를 많이 보는 관계로 1차 인터뷰는 배우자와 함께하고 2차 인터뷰는 결혼이민자만 따로 하였다.

결혼이민자는 일본 출신으로 종교로 인하여 결혼하였으며 1990년 중반에 입국하여 음식점 운영 이후 2009년부터 배우자와 선원 1명과 함께 어선어업을 하고 있다. 결혼 초기 종교로 인한 결혼으로 문화적·언어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배우자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많았다.

자조모임은 일본인 모임이 있으며 5명 정도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다. 주로 일본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가족 여행은 거의 없으나 일본 방문은 6번 정도 했다. 대부분이 경조사 관련한 방문이었으며 자비로 방문한 경우가 많았으며 수협외 고국방문사업에 신청해서 방문한 경험도 있다.

결혼이민자 고향은 시코쿠 근처로 일본에서는 고졸 학력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고 싶어 하나 남편이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활동이 아니더라도 일본어를 가르치는 등의 사회봉사 활동도 하고

싫어 하지만 조업시간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

야간자율학습 감독 경험이 있으나 남편이 싫어해 한 학기만 하고 그만 두었다. 일본어를 알려주는 등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람 있다고 생각하나 시간과 여건이 부족하다.

(3) 사천시 다문화가정 사례

□ 사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공무원 면담

사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다문화가정 577세대로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계집계는 되어 있지 않았으며 센터에서는 약 30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주요 프로그램인 한국어교육은 주 2회로 연간 100-120시간, 아빠교육은 1년 8회가 있으며 대표적인 축제로는 5월 세계인의 날, 9월 운동회, 12월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라서 다문화센터에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교육에 대한 가치가 높지 않으며 특히 결혼이민자의 학력이 낮지 않아 교육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배우자의 장애로 인해 결혼이민자의 경제력에 기대는 경우가 많아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다문화가정의 경제력 확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취업·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주요한 취업·창업 연계 프로그램은 생산부품 제조업체 연계, 구인업체 발굴, 인재 연결, 폴리텍대학과정 연계 등이 있다.

2013년 사회적 기업으로 수공업 관련 업체를 준비했으나 판매와 수익의 저조로 운영이 어려워 결국 업체를 포기한 실패경험이 있다.

다문화가정 취업과 관련하여 이중 언어 조성사업, 방과 후 교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1년 파견 후 지속되지 못하였으며 큰 효과가 없었는데 교육자료 준비과정의 문제, 문화차이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방문교육 사업에 대한 어촌 다문화가정의 지원율이 매우 높으며 추가지원에

대한 요청 또한 많은 편으로 센터의 방문교육 사업은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으로 이루어지며 방문지도사는 생활전반에 도우미 역할을 행하고 있어 어촌지역의 다문화가정에 있어 매우 주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 사천시 다문화가정 사례 1

사천시에서 방문한 첫 번째 어촌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배우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배우자의 조업시간에 따라 삼천포항 근처에서 실시하였다.

결혼이민자는 중국 출신 47세로 2012년 결혼 입국하였다. 배우자는 연안복합, 통발, 외출낚시 조업으로 돔 및 도다리, 노래미 등을 잡으며 1주일에 3~4일 조업한다. 배는 3톤으로 한 달에 5~6회 조업을 하며 한번 조업에 나가면 3~4일 씩 있기도 한다. 어업경력은 40년으로 조업은 배우자만 하고 결혼이민자는 판매 등을 담당한다.

다문화가정 자조모임은 사람이 작고 남편들의 나이 차가 많이 나서 참석을 잘 하지 않는다. 3~4군데 다문화가정을 부인을 통해 알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는 자조모임에 자주 참여하는 편이다.

언어와 말투의 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 이해에 관한 문제가 대부분으로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다. 초기에는 같이 어선어업을 하는 여성들과 이야기하거나 어울리는 것에 대해 의심을 하는 등 의사소통 불편으로 오해를 사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의사소통이 일부 해소되어 현재는 괜찮아졌다.

센터까지 접근성이 좋아서 자주 참석하는 편이며 모국음식을 하기도 하는데, 향신료만 좀 약하면 먹기도 한다. 결혼이민자는 자조모임 통해 집에서 요리해서 먹는다. 센터에서 준비하는 전통춤과 공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중국자녀 1명, 한국자녀 3명(딸2, 아들1)이 있으나 현재는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따로 교육에 필요한 부분이 없으며 기존에도 교육적인 부분의 불만은 거의 없었다.

다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지만 조업시간과 맞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부 교육 등은 참여하나 언어,

그림 교육 등은 물때가 맞지 않아서 참석이 어렵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 사천시 다문화가정 사례 2

사천시에서 방문한 두 번째 어촌 다문화가정 또한 조업시간 때문에 서포면 선전리 검도항에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결혼이민자와 배우자는 조업 중에 인터뷰를 하러 항으로 다시 들어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결혼이민자는 임신 중임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는 베트남 출신으로 배우자는 U턴 귀어인으로 사천 출신으로 외지에 나갔다가 돌아온 지 10년 정도 되었다. 통발과 굴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부인도 같이 조업을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현재 임신 중이나 조업의 일손도 부족하고 해서 배우자와 함께 조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다문화 센터에서 진행하는 방문교육을 2년간 받았으나 한글교육에 부족한 면이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방문교육이 확대 되었으면 한다. 조업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어렵다. 결혼이민자의 이주초기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특히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된다.

지역통발연합회가 있으며, 협회에 다문화가정은 3가정으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는 한국 온 지 10개월로 주위 다문화가정과 자조모임을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서 베트남의 부모와 친척들을 초대하고 싶으나 부모님만 초대가 가능하고 다른 가족은 초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 초대대상 확대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고국 방문과 관련해서도 금전적인 지원의 확대를 바라고 있었으며 행정적인 절차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 하였다.

(4) 장흥군 다문화가정 사례

□ 장흥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공무원 면담

장흥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효성교회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 5월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자체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흥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장흥에는 280세대의 다문화 가구가 있으나 가족사항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배우자들이 정보공개를 꺼려 직업 및 기초 통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계 또한 확보할 수 없었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 한마음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다문화가족상을 수여하였다. 몽골춤 자조모임(일본, 베트남)이 있으며 여행캠프, 인문학 캠프, 남도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장흥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 모국방문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 중이며 매년 5가족 대상으로 모국방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흥 토요시장에서 다문화먹거리장터를 열고 있으며 토요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교류센터 앞에 다문화거리를 조성하여 7개 국가, 8개 음식을 만들어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에게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음식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았다. 먹거리 장터에 참가한 다문화인은 일당 4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 장흥군 다문화가정 사례 1

장흥군에서 방문한 첫 번째 어촌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의 교육시간에 맞추어서 대덕읍 천관농협 2층의 어촌다문화교육장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결혼이민자는 베트남 출신으로 결혼 4년차로 34세이며, 배우자는 54세로 20년 차이가 있다. 자녀는 없으며 배우자의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다. 인접한 고흥군에 입국한 친척이 있으며 서울에 동생이 거주하고 있어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 배우자는 매생이업을 하고 있으며 꼬막도 일부 생산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또한 조업에 동참하고 있다. 처음에는 멀미로 인하여 괴로웠으나 현재는 많이 좋아졌으며 배를 타는 것이 재미있다고 하였다. 휴어기 동안은 매생이발 제작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당 7만원의 수입소득을 올린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역공동체를 통해 한국문화 습득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가족들이 사회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운전면허도 취득했다. 어촌지역의 적응에 있어서 고향인 베트남에 강이 있어 민물고기를 많이 먹어 적응이 쉬웠으며 베트남 친구모임은 1달에 1번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베트남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가족들과도 일주일에 1~2번 베트남 음식을 먹으며 주로 쌀국수, 찜, 튀김 등을 조리한다.

결혼이민자는 장흥 토요시장의 다문화거리의 음식판매에 참여한 적은 없으나 모국음식 판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마량항에서 장사를 하고 싶으나 고생을 염려해서 가족들은 장사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비로 모국방문경험이 있으며 국내 여행도 종종 하는 편으로 김해, 서울, 인천 등 여행경험이 있다. 결혼이민자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배우자 어머니가 가계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 가지고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이후 서로를 알아가면서 괜찮아졌다. 모국으로의 송금은 1년에 몇 번 보내주고 있다. 센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부부동반 참여가 많으며 배우자의 만족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센터 교육을 받고 있다.

□ 장흥군 다문화가정 사례 2

장흥군에서 방문한 두 번째 어촌 다문화가정은 장흥군 회진면 대리에 있으며 정남진 해양낚시공원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있어 바다와 근접한 거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2층 양옥집으로 깨끗한 신축건물이었다. 거주지근처 5분 거리 내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있어 자녀의 교육환경은 나쁘지 않았다.

결혼이민자는 베트남 출신으로 결혼 5년차이며 한국어가 서툴러 배우자를 대상으로 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배우자는 고향으로 U턴한 귀어인으로 부모님 집에서 딸과 함께 동거하고 있었다.

어업권은 부친이 가지고 있어 같이 조업을 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도 겨울 미역채취 등으로 바쁜 시기에는 같이 조업하기도 하였지만 결혼이민자는 조업을 따로 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를 원하고 있다. 어업인 후계자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어업은 연안복합, 통발로 미역 및 다시마 양

식을 하고 있는데 건다시마 생산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기계를 사서 다시마 건조를 시작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자조모임에 대해 가족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에 가출 등의 소문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결혼이민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다만 근처에 베트남 사촌동생이 한마을에 살고 있어 종종 만남은 가지고 있다. 모국방문 경험은 없으며 수협이 모국방문 사업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베트남 음식은 인터넷전문점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조리하기는 하나 가족들은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 같이 먹지는 않는다. 자녀는 딸(4세)이 있으며 지역의 어린이집이 근처에 있어 크게 불만은 없다.

결혼이민자는 현재 한국어 교육의 부족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수준인데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방문서비스(한글교육)를 받았으며 기회가 생기면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싶어 하고 있다.

□ 장흥군 다문화가정 사례 3

장흥군에서 방문한 세 번째 어촌 다문화가정은 장흥군 대덕읍 용암리에 있으며 바다와 맞닿은 도로에 위치해 있었다. 슬레이트지붕에 조금 낡은 주택으로 조그마한 마당에 베트남 향신료를 키우고 있었으며 마당의 평상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배우자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알부자로 결혼이민자 역시 생활력이 매우 강해 동네에서도 모범가정으로 손꼽히고 있었다.

결혼이민자는 베트남 출신으로 결혼 10년차이며 30세이며 배우자는 47세이며 배우자의 어머니와 아들 2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어촌계에서는 두 번째 다문화가정으로 마을에 베트남 결혼이민자가 4명이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조모임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는 매생이 양식을 주로 하며 통발(낙지, 문어)도 함께 하고 있다. 연소득은 8천만 원으로 결혼이민자 또한 같이 조업을 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조업에 동참하고 있어 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부모님 또한 맨손어업으로 낙지를 낚고 있다. 마을에서 참꼬막 양식도 하고 김 양식도 하고 있어 2~3천만

원 정도 소득이 분배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불편한 점은 초창기에는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컸으며 초기에 베트남 음식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으나 현재는 가족들도 좋아하고 주로 월남 쌀과 쌀국수를 조리한다. 결혼이민자가 가계경제권도 가지고 있으며 운전면허도 취득하여 시내로 이동하는 데 제약은 없다.

모국방문 사업에 대해서는 수협을 통해 기존부터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혜택을 받았다. 모국방문을 많이 하는 편으로 베트남에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씩 갔었는데 1회 비용은 예전에는 3백만 원, 요즘에는 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결혼이민자의 아버지가 한국에 한번 방문했으며 3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갔다.

자녀는 아들 2명이 있으며 통학버스가 있어 자녀 학교 등원에는 문제없다. 학교교육 등에 대한 불만은 없다. 결혼이민자는 다문화센터 프로그램에는 거의 참여한 적 없으며 초기에 방문교육서비스를 받았다. 이후에 농협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

(5) 포항시 다문화가정 사례

□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공무원 면담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포항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각종 사업은 국비로 수행되어 회계에 있어 투명하나, 대다수 직원이 계약직이라 잦은 교체로 인해 지속적·장기적인 업무수행의 어려움과 함께 공모 등 외부 사업이 힘들다는 단점도 존재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매뉴얼을 넘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나 정보 공유에 대한 갈급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포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현재 1,808명이며, 센터에서는 등록 결혼이민자 1,300여 명만 파악이 가능한 상태로 어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없는 상태다.

도비 5천만 원을 투자해 한국어교육 8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만 인정되어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이밖에도 연간 6개 반을 운영하는 이중언어 조성사업과 부부교육, 방문교육 등을 진행 중이다. 프로그램 방식에 있어서는 강의식 효과가 적어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다. 남구는 장기산방에

서 연밥 만들기 체험, 복구는 두부·된장 담그기 체험을 하였으며, 2015년에는 영덕군에서 해양체험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예산문제로 주로 무료지원체험과 취약계층 우선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다.

포항시의 어촌 다문화가정은 주로 구룡포읍, 흥해읍, 장기면에 거주하고 있다. 어촌 다문화가정 현황에 대해 센터 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지역의 수산물 가공공장에 겨울철 지역특산물인 과메기 손질을 위한 일자리에 결혼이민자들이 몰린다고 한다.

한편 결혼이민자들의 남편이 주로 고령이며 참여의지가 없어 어촌 다문화가정의 센터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센터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들은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많은 편인데, 역내 방문지도사 채용을 원하는 사람도 많고 자격증을 가진 인력도 충분한 편이지만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장기간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방문서비스에 관한 사업 프로그램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좋은 정책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유사중복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포항시 다문화가정 사례 1

남편은 현재 자망통발을 하고 있으며, 주력생산 품목은 아귀, 참가자미, 오징어, 청어 등이다. 그러나 세월호 이후 어선의 개조나 증축에 대한 규제, 어망·유류가 상승에 비한 어가 등으로 장비 부족 및 보조를 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언어 차이에서 기인하는 소통의 문제가 생활적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어촌의 지리적 입지 탓에 자동차가 없으면 왕래가 힘들다는 점, 조업으로 인해 개인시간을 내기 힘들다는 점 등을 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호소하였다. 2012년 수협이 모국방문지원 사업을 경험한 사례로 한국마사회와 수협중앙회를 통해 항공비 및 50만원 상당의 경비 수혜를 받았다. 결혼이민자들의 모국방문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중국의 경우 비자발급이 힘들고 3~4일씩 걸려 부모 경조사 등에는 공항에서 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현재 어촌계에 가입했으며 어민후계자 지원(4천만 원, 20% 담보, 이자 연 3%)을 받고 있다.

집안의 경제권을 남편이 가지고 있으며, 모국에 대한 송금을 하지 않고 있다. 부부 간 여행 경험도 없어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적응이 어려운 형편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결혼 초기 센터 및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에 결혼이민자가 참석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배우자와 다른 다문화가정과의 관계 때문인데, 다문화가정의 특성상 남편들 간의 연배 차이가 크고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끼리 뭉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후배 관계가 많은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남편 선배의 나이 어린 부인이 나이가 많은 남편에게 후배처럼 대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다문화가정 모임 참석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재혼이며 현재 자녀는 3명으로 고등학생과 중학생은 전처의 자녀, 초등학교 4학년은 결혼이민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이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없으나,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이 서툴러 초등학교 딸이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으며, 언어 문제로 인한 의사소통 부족이 자녀 양육 전반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가 직접 배를 타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과메기 공장 일에 참여하고 있다. 소득은 일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많을 때는 하루 10-20만원을 벌고 있다. 배우자는 십여 년 전 귀어를 했으며, 부인과 함께 어업한 지는 5년째이다. 부인이 어업을 함께 하게 된 것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위판금액은 억 단위이지만, 경비로 반 정도가 지출되며 어업 특성상 손실률이 커서 세금도 80-90%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 문제는 비단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어업인 일반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로 어업인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알기 어렵게 한다. 이는 어업이 위판 특성상 현금 거래 위주이나, 손실률로 인한 소득액의 기복이 큰 탓이다. 한편 영일만 쪽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장인, 장모가 그물 작업하는 집이 있다는 말을 전하기도 하였다.

□ 포항시 다문화가정 사례 2

결혼이민자는 조선족 출신으로 2005년 결혼 후 입국했으며, 모포어촌계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1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조업을 하고 있으며, 자망을 통해 아귀 조업을 하며, 양포 혹은 포항에서 위판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결혼 이민자는 그물 손질도 직접 하고 있으며, 배를 타기 때문에 새벽 3시에서 3시 30분 경 기상한다.

수협 모국방문지원 사업을 통해 모국방문 경험이 있다. 결혼이민자는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경매나 판매를 위해 수산물을 싣고 직접 운전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중국 방문은 총 3번으로 결혼 3년째 목사의 추천·소개로 1번, 아버지의 폐암으로 1번, 수협 모국방문지원 사업을 통해 1번 다녀왔다.

배를 타는 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지금도 뱃멀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은 365일 돈을 만질 수 있고 시간이 자유로우며, 새벽에 일해 여름에는 덜 덥기 때문에 농사보다 낫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겨울에는 춥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했다. 2015년 위판금액은 약 1억 가량이다.

결혼 초기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 많았다고 한다. 한번은 산에 올라 가니 마을 사람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감시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족센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방문한 경험이 없으며, 별로 참여의향도 없었다. 조선족 출신이기 때문에 언어생활에 불편함이 없어 필요성을 덜 느끼고 어업 때문에 개인시간을 내기도 힘들뿐더러 있더라도 개인정비에 할애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중국인 모임에는 한 번씩 참여하지만 바쁘기도 하고 거리가 멀어 귀찮아 잘 참여하지는 않는다. 대신 밴드, 카카오톡을 통해 중국인 모임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시어머니와 함께 동거하고 있으며, 집에서도 중국 음식을 가끔씩 하고 있다. 자라난 환경이 달라 문화적 차이가 있으나, 결혼이민자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녀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현재 총인원이 5명인 분교를 다니고 있다. 시골이라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등을 보내기 힘들어 이에 대한 불만이 많다. 마을

에 학원이 없어 개인교습을 위해서는 시내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시내학교 통학을 위해 분교 폐교를 주위 학부모에 건의하기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부부여행은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다니는데, 자영업이기 때문에 새벽 일 마치거나 입찰이 없을 때 혹은 하루 쉬고 놀러 갈 수 있다고 한다. 일 때문에 여가를 즐기지 못한다는 다른 다문화가정의 사정과 비교해보면 각 가정의 경제적 형편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차이를 알 수 있다. 경제권을 부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는 요리에 대한 개인 소질이 있어 식당 일을 희망하고 있다. 모포항은 겨울에 대게를 잡는 사람들 집에 식당 손님이 있기도 해서 직접 잡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사업성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스스로 일하고 돈을 벌기 때문에 모국 송금 건으로 가족들이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사촌들이 많이 있으며, 현재 부모님은 중국에 있다. 가끔 한국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고 있다.

□ 포항시 다문화가정 사례 3

흑룡강성 출신으로 1994년 결혼과 함께 입국하여 22년째 거주해오고 있다. 4.52톤 연안어업을 하다가 2015년 7월부터 8억을 들여 배를 개조(수협대출)하여 11톤 근해어업을 하고 있다. 조업은 한 번 나가면 1박 2일 혹은 2박 3일이며, 선장 포함 6명이 탑승하고 있다. 스리랑카 선원 2명이 있는데, 아시아마트 등에서 식품을 구입하며 외국인선원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다. 숙소는 지인의 빈집을 관리해주며 쓰고 있으며, 결혼이민자가 사무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초기에는 배를 함께 탔으나 근해어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현재는 사무장 역할만 하고 있다.

초기 시부모랑 동거했으나, 시어머니의 권유로 3년차부터 분가해서 살고 있다. 업종은 근해통발이며 문어, 살고동을 연중하고 있다. 부인은 2002년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자녀 등하교와 위판·판매 때 이용하고 있다.

현금거래가 위주인 어업 특성상 돈이 되지만 추위와 멀미 등은 어업의 단점으로 꼽고 있다. 또한 조업이 삶의 중심이다 보니 세상물정을 잘 모르겠다고

전해 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활 적응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참여한 경험은 없으며, 시내에 사는 고향 언니들은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외진 곳에 살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으며, 자조모임도 자녀 관리로 잘 안 된다고 한다. 결혼 초기에는 시내에 나가고 싶어 배우자와 싸움도 많이 하였으나 현재는 어업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바쁘기 때문에 여행은 상상도 못 해 봤다고 전했다.

결혼 3년 만에 경제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주도적으로 가계를 끌어가면서 문화 적응이 수월해졌다고 한다. 자녀는 총 3명인데, 23살과 19살의 딸과 14살의 아들로 자녀교육 및 학교생활의 불편함은 느끼지 않고 있다. 친정식구는 고모 2명, 삼촌 2명, 고모의 딸들까지 거의 다 한국에 나와 있다. 예전에는 친정이라 생각하고 자주 친척방문을 했으나 지금은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 자주 하고 있지 않다. 현재 동생만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

(6) 울진군 다문화가정 사례

□ 울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공무원 면담

울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직영체제이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소속으로 6명이 근무하며 비상근 방문지도사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 220개 다문화가정 중 100여 가구가 베트남 출신으로 베트남 통·번역자 서비스도 시행 중에 있으며 국적취득자료 등 초기정보제공 위주의 사업이 우선시되고 있다.

결혼 입국, 출산, 자녀 지원 등에 맞춰 사업을 진행 중이며, 취업 및 창업 지원도 있으나 지역 사정 등으로 단순노무직 위주로 취업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차량을 운영 중에 있으나 방문 시간의 한계, 배차시간, 지역적 거리 등에 의해 자발적 참여 및 지속적 교육은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어촌지역 다문화가정을 위해 차량을 배차하고 싶으나 새로운 차량을 운영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부부교육, 시어머니교육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지역공부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언어 환경 조성 사업을 시

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방과 후 강사로 알선하고, 도의 정책 사업으로 방과 후 교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과 농협에서 실시하는 모국방문지원 사업에 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협과의 연계는 없어 향후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입국관리에서 지역 센터를 홍보하여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며 민원실에서 체류자격비자코드를 등록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차원에서는 결혼이민자 현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 울진군 다문화가정 사례 1

울진군에서 방문한 첫 번째 어촌 다문화가정은 언덕에 위치하여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거주하는 주택은 마당이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었으며 주택은 여러 채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결혼이민자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이 따로 있었다. 창고가 있어 조업에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결혼이민자는 베트남 출신이며 배우자는 연안자망과 통발 어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결혼이민자는 자녀가 유아로 결혼이민자의 부모님을 초대하여 한국에서 같이 지내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육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어촌 생활에 적응을 도와주고 있다.

배우자는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어업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결혼이민자의 아버지가 배우자와 함께 어선어업을 하고 있어서 노동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거주를 바라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전업주부로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온라인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경제적 사정이나 취업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하여 가정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자조모임 등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

모국 방문사업에 당첨되더라도 1회에 약 1천만 원 이상의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액적 부담이 크다. 지원금의 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작아 모국

방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협 모국방문 사업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촌계원에게 정보를 전달할 체계도 미흡하여 어민과 다이렉트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결혼이민자의 교육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받는 것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의 모임에 대해서도 불신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한글교육을 하고 있다.

지역의 수산가공공장 등에 다문화인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실정으로 월 150~16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다. 그물공장 또한 150만원 내외의 급여 수준이지만 수산가공공장은 추위로 인하여 그만두기도 하고 서서하는 작업 조건 등 지속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노동여건이 열악하여 이직률은 매우 높은 편이며 문화적으로 지속적인 일에 익숙하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 울진군 다문화가정 사례 2

울진군에서 방문한 두 번째 어촌 다문화가정은 해안근처 바다와 가깝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양식장 운영을 위해 해수채취를 위한 위치로 판단된다.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서 만든 주택이었으며 뒤쪽으로 양식을 위한 시설이 있었으며 수조에 전복치패를 생산 중에 있었다.

결혼이민자는 캄보디아 출신이며 2009년 결혼했으며 배우자는 전복, 해삼 양어장을 운영하며 7년차 운영 중이며 지자체 방류사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양어장은 배우자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는 육아에만 힘을 쓰고 있다. 배우자는 기존에 양어장을 운영하던 지인으로부터 양식을 배워 귀어했으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원이자 농민사관학교 2년 경험이 있다.

결혼 초기 언어적문제로 인하여 많은 다툼이 있었으나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 등을 통해 문제점을 많이 해결했으며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2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

결혼이민자는 고국방문의 경험은 있으며 수협을 통한 고국방문 경험은 없었

다. 수협이 모국방문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통해 정보의 전달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결혼이민자는 캄보디아 음식을 가끔씩 해서 먹으나 배우자는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다.

유치원 등의 통학차량 등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양호하나 육아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불편하며 운전면허 취득 사업이 매우 활용도가 높으며 만족도 또한 높다.

결혼이민자는 초기에 펜션, 모텔의 주방에서 일했으나 현재는 육아문제로 일을 그만두었으며 수산물 가공 관련 일자리가 있으나 언어와 육아 문제로 쉽지 않은 실정이며 장기적이지 않고 아르바이트 수준이다. 다문화가정 일자리를 위해서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공동 작업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울진군 다문화가정 사례 3

울진군의 세 번째 어촌 다문화가정은 구산항 뒤쪽의 마을안쪽에 위치한 1층 집으로 마당이 넓은 집이었으며 어구나 조업에 관련된 물품은 보이지 않았다. 부모님으로부터 최근에 독립하여 결혼이민자와 두 자녀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결혼이민자는 베트남 출신이며 배우자와 2001년에 결혼하였으며 배우자는 2001년에 귀어 하여 부모님과 함께 어선어업을 하고 있다. 전복, 미역과 더불어 자망어업을 하고 있다. 어업권 승계를 위해 부모님과 같이 조업을 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는 조업을 하지는 않으나 수산물을 경매장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에 대한 혜택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조합원 혜택은 장비 지원 사업, 후계자양성사업, 면세유가 거의 전부이다.

지역에 고령자들이 많아 새로운 아이템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바다가 포화 상태인데 비해 어구를 도둑질하거나 타인의 어구를 무단으로 끊어버리는 등 어촌의 문화 또한 삭막해지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

고 있으나 육아와 가족 조업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조업을 위한 다양한 소일거리들이 많아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벽조업과 경매로 인하여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 유치원 통학버스 문제 등 교통문제와 시간문제로 인하여 결혼이민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학교 통학을 시키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본인이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어 쓰고 싶어 하지만 자녀양육의 문제와 일하는 만큼 지출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족들이 반대하고 있다. 조업과 관련하여 어구 수선 등 단기 일자리는 많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유지할 일자리는 많지 않다.

3) 소결 및 시사점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경제적 불안, 부부·자녀 등 가족관계, 언어학습을 위해 방문해야 하는 센터에의 낮은 접근성 등의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를 통한 의견들은 어촌 다문화가정에서만 나타나는 문제점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전반의 문제이기는 하나 어촌 지역의 접근성 및 어업 노동의 위험성 및 시간적 제약 등 어촌 지역만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어촌생활 적응에 있어 결혼 초기의 적응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적응의 어려움이 달랐는데 특히 결혼 초기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거나 다문화센터의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어촌의 특성에 따라 방문서비스만 이용한 경우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한국에 같이 거주하는 경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일부는 조업에 동참하여 어촌 인력난에 일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어촌 생활 적응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어촌지역의 노동력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촌 다문화가정에서 결혼이민자가 느끼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

제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한국어 교육의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점이 가장 빈번히 지적되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이 가장 우선시 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

많은 어촌 다문화가정에서 모국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일부는 조리한 음식을 가족과 같이 먹기도 하는 등 가족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또한 지역적으로 다문화가정과 융합 및 다문화가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흥 토요시장의 다문화음식거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면담조사를 한 일부 가정에서는 다문화음식거리에서 모국의 음식을 만들어 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모국의 음식을 이용한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문화가정이 운영하는 식당의 경우에는 초기 소득창출이 힘들며 2~3년 이상의 꾸준한 교육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성공가능성이 높다. 최근 외국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의 이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촌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의 문제점으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고창 일부지역은 초등학교 학급의 50% 정도가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 내 따돌림 문제는 면 소재지의 학교에 비해 덜 할 수 있으나 학습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요소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어촌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저학년일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맞춤형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자녀가 중학교 이상 진학할 경우 학교 내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장조사를 기초로 어촌의 다문화가정이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본격화 되었다고 가정할 때 초기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이 10대 전후 또는 10대 중반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현재 어촌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초등학생이 많으나 자녀가 중학교 이상의 진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러한 학교 내 문제점이 가중될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 경제적 활동을 할 경우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게 되며 특히 어촌의 경제활동 시간이 일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자녀 돌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비교적 학

습능력이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는데 부모의 경제활동시간 동안 자녀가 방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장조사 중 가장 많이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였다. 어촌 다문화가정의 경제활동에 있어 조업시간과 판매시간 등 경제활동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물때에 따라 달라 정해진 시간에 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에 참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어촌 다문화가정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인 언어 문제에 있어 학습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장기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경제활동을 원하는 결혼이민자와 일거리와의 연계 부족이 가장 문제로 도시 지역은 사회적 기업과 같이 결혼이민자의 언어 및 특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반면 어촌 지역에는 단순노무직인 수산물 단순가공 및 어구 관련 일 등 단순노무직 위주의 질 낮은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결혼이민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색에 맞추어 할 수 있는 공동 작업장 형태가 가장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2.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개요

□ 설문조사의 목적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촌 다문화가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야 하는 기초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초적 통계자료조차 명확하지 않아 최소한의 어촌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어촌 다문화가정의 일반적인 실태는 현장조사를 통해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촌 다문화가정으로 어촌지역의 일반적 생활에서 및 다문화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의 어려움을 파악하며 어촌지역의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서비스 등 보편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다.

□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표본추출

모집단은 전국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분석을 위한 목록을 가진 연구모집단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887곳으로 지역적 분포를 보면 경남이 21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가 57곳으로 가장 작았다.

각 지역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당 다문화가정 3가정을 추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가정 당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설문응답자로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8〉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역	경기	경북	전남	제주	충남	강원	경남	합계
모집단	28	107	289	57	106	81	219	887

자료: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내부자료(2016)

□ 설문조사 방법 및 내용

조사방법은 우편조사로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통해 조사 실시를 고지하고, 예상되는 설문항목을 공유하였고, 이후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약 2회에 걸쳐 전화로 설문요청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 및 프로그램의 불참 이유를 파악하며, 또한 다문화가정으로서 어촌생활에 어려운 부분을 파악하며 경제적인 활동 및 사회문화적 활동과 관련한 부분을 파악하였다.

어촌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서비스 및 결혼이민자의 재능기부 등 활용가능성에 대한 항목,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파악하였다.

〈표 3-9〉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분류	내용
다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석 프로그램 불참 이유
어촌 생활	어촌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 활동
다문화가정 필요서비스	지원 연계방안 사회경제 활동 모국방문 여부
인적사항	재능 활용가능 분야 인구통계적 질문

□ 설문조사 응답자

설문조사의 응답은 배우자 91명, 결혼 이민 여성 92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다문화가정 거주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 경남이 가장 많은 28가구였으며, 전남이 25가구, 충남이 17가구였다.

〈표 3-10〉 응답자 거주분포

구분	빈도(가구)	비율(%)
강원	8	8.7
경남	28	30.4
경북	10	10.9
전남	25	27.2
제주	4	4.3
충남	17	18.5
합계	92	100.0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 설문조사 (2016)

다문화가정의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약 61%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중국이 약 18%로 비교적 높았으며 일본,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11〉 다문화가정의 출신국가

출신국가	빈도	비율(%)
몽골	1	1.1
베트남	55	61.1
일본	3	3.3
중국	16	17.8
캄보디아	3	3.3
키르기스스탄	1	1.1
태국	4	4.4
필리핀	7	7.8
합계	90	100.0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 설문조사 (2016)

2) 배우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다른 다문화가정과의 교류는 교류하고 있음이 73.3%, 교류하지 않음은 26.7%로 교류하는 비율이 전적으로 높았다.

〈표 3-12〉 다른 다문화가정과의 교류

구분	빈도(명)	비율(%)
교류하고 있음	63	73.3
교류하지 않음	23	26.7
합계	86	100.0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 설문조사 (2016)

다른 다문화가정과의 교류계기는 전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는 경우가 80.6%로 많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정 사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수협 및 어업인 후계자 모임 등 또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표 3-13〉 다른 다문화가정과의 교류 계기

구분	빈도(명)	비율(%)
지역수협	8	11.9
선주협회	1	1.5
어업인후계자	3	4.5
지원센터	54	80.6
기타	1	1.5
합계	67	100.0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 설문조사 (20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60%가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배우자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교육 참여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우자의 참여 비율이 이민자의 프로그램 참여비율과 비슷하여 가족동반 참여율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여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54	60.0
없다	36	40.0
합계	90	100.0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 설문조사 (2016)

참여 장애요인으로서는 어촌의 생활특성에 따른 시간적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으며 두 번째로 어촌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거리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표 3-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 장애요인(다중응답)

항목	빈도(명)	응답비율(%)	사례비율(%)
집에서 너무 멀다	27	20.9	30.3
시간 맞추기 힘들다	49	38.0	55.1
겨울에도 바쁘다	10	7.8	11.2
다문화가정을 드러내기 싫다	4	3.1	4.5
도움이 되는 내용이 별로 없다	9	7.0	10.1
참여 안 해도 만족	7	5.4	7.9
프로그램 정보 부족	19	14.7	21.3
기타	4	3.1	4.5
합계	129	100.0	144.9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 설문조사 (2016)

어촌 다문화가정으로서의 어려움은 역시 언어 등 의사소통과 관련된 한글교육의 문제와 자녀학습 및 생활관리 문제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위치한 어촌의 지역적 특성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16〉 어촌 다문화가정으로서의 어려움(다중응답)

항목	빈도(명)	응답비율(%)	사례비율(%)
언어 등 의사소통	47	29.2	52.8
자녀학습 및 생활관리문제	48	29.8	53.9
가족(부부, 시부모) 관계	15	9.3	16.9
경제적 문제(모국송금, 일자리)	37	23.0	41.6
종교적 문제	3	1.9	3.4
주변 인식	11	6.8	12.4
합계	161	100.0	180.9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 설문조사 (2016)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비교적 지지율은 높았으나 보통 및 지지하지 않음의 비율 또한 30%가 넘었으며 전반적인 지지율은 높은 반면 여전히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7〉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지지함	18	19.8
지지함	43	47.3
보통	27	29.7
지지하지 않음	1	1.1
전혀 지지하지 않음	2	2.2
합계	91	100.0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 설문조사 (2016)

3) 결혼이민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63.7%가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배우자의 참여비율에 비해 소폭 높은 비율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참여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판단된다.

〈표 3-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여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58	63.7
없다	33	36.3
합계	91	100.0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 설문조사 (20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 장애요인은 배우자와 유사한 결과로 어촌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거리의 문제와 어촌의 생활특성에 따른 시간적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3-19〉 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 장애요인

구분	빈도(명)	비율(%)
집에서 너무 멀다	35	40.2
가족의 반대	1	1.1
시간부족	32	36.8
육아문제로 바쁨	8	9.2
프로그램 도움 안 됨	7	8.0
기타	4	4.6
합계	87	100.0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 설문조사 (20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 장애요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촌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거리의 문제와 생활특성에 따른 시간적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부분 중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문항의 응답비율이 높아 이에 관한 정책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0〉 어촌 거주로 힘든 점(다중응답)

구분	빈도(명)	응답비율(%)	사례비율(%)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42	19.0	47.7
겨울에도 쉬지 못한다	23	10.4	26.1
바다일이라 위험하다	30	13.6	34.1
어업으로 혼자인 시간이 많다	9	4.1	10.2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다	33	14.9	37.5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27	12.2	30.7
다른 결혼이민자와 만나기 힘들다	15	6.8	17.0
자녀 학원보내기 힘들다	42	19.0	47.7
합계	221	100.0	251.1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 설문조사 (2016)

현재 하고 있는 경제적 활동은 마을어장의 수산물 채취가 3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그물 낚기(13.6%) 등 어업관련 경제 활동인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20.3%로 나타났다.

〈표 3-21〉 현재 경제적 활동(다중응답)

구분	빈도(명)	응답비율(%)	사례비율(%)
수산물가공공장 근무	9	7.6	10.5
마을어장 수산물 채취	40	33.9	46.5
그물 집기	16	13.6	18.6
수산물식당 및 판매	9	7.6	10.5
통번역서비스	5	4.2	5.8
고향음식 관련 사업	1	0.8	1.2
일반기업체	14	11.9	16.3
경제활동 안 함	24	20.3	27.9
합계	118	100.0	137.2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 설문조사 (2016)

모국에 관련해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국음식 만들기가 가장 높은 53.8%로 나타났으며 모국어 통번역이 33.3%이었다.

〈표 3-22〉 모국에 관련해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구분	빈도(명)	비율(%)
모국어 통·번역	26	33.3
모국음식 만들기	42	53.8
전통문화(춤, 노래)	4	5.1
기타	6	7.7
합계	78	100.0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 설문조사 (2016)

3) 소결

어촌 다문화가정의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결혼이민자의 연령은 30대, 20대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적으로는 경남 및 전남 지역이 많았으며, 자녀수는 2명, 1명 순이었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는 5% 수준이었다. 베트남과 같이 특정 국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관련된 정책적 대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어업세력이 비교적 높은 전남과 경남지역의 분

포는 일반적인 수준이었다.

어촌 다문화가정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2000년대 이후로 꾸준히 결혼이민자가 정착하고 있고 현재 20대의 분포가 31%로 낮지 않아 다문화가정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가정의 출산비율은 높은 편으로 향후 지역인구 유지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지역인구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속가능한 어업인의 확보를 위한 방안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어촌 다문화가정의 배우자는 다른 다문화가정과의 교류가 비교적 높게 낮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리적인 요인과 조업시간의 문제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촌 다문화가정의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대안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용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지리적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인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업관련 단체 및 어촌계를 이용하는 지역거점 역할 수행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촌 다문화가정에서 배우자와의 언어 및 의사소통의 문제는 결혼이민자의 한글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및 부모교육서비스의 활성화 및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율은 높았는데, 이는 조업과 관련한 경제활동인 반면, 보통 및 지지하지 않는 경우는 결혼이민자에게 사회경제적 활동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결혼이민자는 다른 다문화가정과의 교류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에서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조업시간에 따른 시간의 문제와 더불어 어촌이라는 지리적 요인에 의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이민자의 어촌 다문화가정으로서의 어려움으로 비중이 높은 것은 자녀를 학원에 보내기 힘들다는 것과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다는 점이며, 또한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등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문항의 응답 비율이 매우

높았다. 방문교육 사업 중 자녀생활 서비스 등의 강화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주로 수산물 채취 및 그물손질 등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경제 활동은 주로 단기간이라서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힘든 것으로 이에 따라서 조업을 위한 준비 과정이나 조업 후 위판과 같은 처리과정 등을 돕는 조업의 보조적 역할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활용적 측면에서 모국음식 만들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국음식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자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일부 어촌시군에서는 활용하고 있으며 장흥에서와 같이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모국음식 만들기가 일반적인 반면 모국어 통번역은 고등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의 활용은 모국음식 만들기가 가장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개요

(1) 설문조사의 목적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서는 현행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에 대한 체계적 실태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현행 연구 및 정책은 도시 및 농촌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어 어업 및 어촌의 특수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실태에 대한 체계적 파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실태 분석은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연안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어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며 이는 이후의 심층 면접 분석과 연계되어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2)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표본추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어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행정구역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정부중앙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다문화가족 담당자를 표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3-23〉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표본추출

구분	내용
조사대상자	공무원: 도, 시·군 단위 다문화가정 관련 업무 담당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지역 다문화가정 관련 업무 담당자
조사대상 지역	전국
조사대상 규모	전체 218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5명 + 다문화담당 공무원 114명(도·단위 지자체 공무원: 21명, 시군단위 지자체 93명)]
조사방법	사전 대상자 파악을 위한 전화 컨택 및 선정된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팩스/이메일/전화설문 조사 수행

(3) 설문조사 방법 및 내용

조사방법은 전화조사이며, 필요한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활용하였으며, 해당 지자체 및 기관에 조사 실시를 고지하고, 예상되는 설문항목을 공유하였다.

이후 전문조사원이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팩스,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양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중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유무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며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중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을 분석, 이 중 어촌 다문화가정에게 지원되는 비중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 및 우선시되어야 할 정책을 파악하여 정부의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개발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제도 유무, 어촌 다문화가정의 어려움 및 제약사항,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 및 협력방안 등이다.

〈표 3-24〉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분류	내용
담당 지역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제도/프로그램	센터의 일반현황 지원제도 유무 지원제도 필요성
어촌지역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시행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기존 정책의 필요성 및 비중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협력	다문화가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

(4) 응답자의 특성

본 조사를 위해 지자체 다문화가정 관련 업무 담당자와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은 총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완료했으며 이중 도 단위 공무원이 21명, 시군 단위 공무원이 93명이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완료했으며 전남과 경남이 가장 많은 31명과 18명이었다.

〈표 3-25〉 지역별 응답자 구성비

응답자 유형	전체 공무원 (A+B)		공무원 지역단위 구분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도단위(A)		시군단위(B)			
지역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경기	26	22.8	4	19.0	22	23.7	6	5.7
인천	2	1.8	-	0.0	2	2.2	2	1.9
충남	6	5.3	-	0.0	6	6.5	10	9.5
강원	10	8.8	2	9.5	8	8.6	12	11.4
경남	17	14.9	4	19.0	13	14.0	18	17.1
경북	8	7.0	3	14.3	5	5.4	10	9.5
부산	4	3.5	-	0.0	4	4.3	2	1.9
울산	5	4.4	-	0.0	5	5.4	2	1.9
전남	21	18.4	3	14.3	18	19.4	31	29.5
전북	11	9.6	5	23.8	6	6.5	8	7.6
제주	4	3.5	-	0.0	4	4.3	4	3.8
총계	114	100.0	21	100.0	93	100.0	105	100.0

2) 센터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제도/프로그램

어촌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의 유무는 90.5%가 지원제도(프로그램)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9.5%는 있다고 응답했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규모는 통합적 정책지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인력, 예산의 증대로 정책지원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6〉 어촌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유무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있다	10	9.5
없다	95	90.5
합계	105	100.0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2016)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이 어촌 다문화가정이 이용하기에 전반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우 불리하다’ 10.5%, ‘불리한 편이다’ 40.0%, ‘보통이다’ 28.6%, ‘불리하지 않는 편이다’ 18.1%, ‘전혀 불리하지 않다’ 2.9%로 ‘불리한 편이다’가 가장 높았다. 이는 어촌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어촌은 접근성이 낮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주의 정책서비스를 이용하기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7〉 어촌 다문화가정의 정부 지원정책 이용에 대한 불리함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 불리하다 (5점)	11	10.5
불리한 편이다 (4점)	42	40.0
보통이다 (3점)	30	28.6
불리하지 않는 편이다 (2점)	19	18.1
전혀 불리하지 않다 (1점)	3	2.9
합계	105	100.0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2016)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을 도시나 농촌과 비교할 때 어촌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에 있어서는 43.8%가 ‘필요한 편’이며 18.1%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어촌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시나 농촌에 비해 어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8〉 도시나 농촌과 비교할 때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5점)	19	18.1
필요한 편이다 (4점)	46	43.8
보통이다 (3점)	26	24.8
필요 없는 편이다 (2점)	14	13.3
합계	105	100.0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2016)

□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실태

다문화 관련 정책사업 수행여부를 살펴본 결과 한국어 교육과 상담 및 지원 사업 등은 비교적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었으나 경제지원 및 주택지원 사업의 비율은 비교적 낮았다. 자녀교육 또는 양육과 관련된 정책 수행은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수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향후 자녀와 관련된 정책사업 수행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9〉 다문화 관련 정책사업 수행여부

구분	사업 수행	미수행	구분	사업 수행	미수행
한국어교육/통역지원	105	0	여가/문화 활동 지원	99	6
한국문화 체험 및 교육	103	2	직업훈련, 취업 상담/알선	99	6
국적취득지원	89	16	자녀양육	82	23
성/가정폭력 상담 및 지원	105	0	자녀교육 지원	101	4
법률상담지원	101	4	직접적 경제지원	18	87
결혼이민자자조모임운영	103	2	주택지원	8	97
건강/의료지원	105	0	한국인 다문화 인식교육	101	4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2016)

□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협력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방향은 ‘자녀교육 및 교육지원 방안 모색’이 20%로 가장 높았으며 ‘어촌 특성을 고려하는 정책개발’이 18% 이었다.

〈표 3-30〉 어촌 다문화가정 중점 고려 정책방향(복수응답)

구분	사례 수	비율
어촌특성고려정책개발	53	18%
부처기관별 협조체계 구축 및 강화	25	8%
관련법개선	19	6%
어촌 생산 활동 및 참여방안	32	11%
결혼이민자적응지원확대	46	15%
다문화가정보호방안마련	19	6%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방안 모색	59	20%
다문화가정인식개선교육	44	15%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2016)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 지역연계 지원방안은 ‘방문서비스 강화’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촌계 교육을 통한 다문화인식 개선’이 27%로 다음으로 높았다.

실질적인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는 ‘방문서비스 강화’를 통한 어촌의 지역적 불리함과 낮은 접근성을 상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표 3-31〉 다문화가정 서비스 지역연계 지원방안

구분	사례 수	비율
어촌 거점 다문화센터 지부	10	10%
지역수협 연계 어촌 서비스 강화	26	25%
방문서비스 강화	40	38%
어촌계 교육 통한 다문화인식 개선	28	27%
모름/무응답	1	1%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2016)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통번역서비스 등의 언어 관련활동’이 42%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홍보활동(지역축제)’이 28%로 다음으로 높았다. ‘음식관련 활동(모국음식식당) 등 식문화 활동’은 24%로 비교적 낮았다. 통번역서비스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모국어를 활용한다는 점과 다른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2〉 여성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역할 가능 분야

구분	사례수	비율
언어관련 활동(통번역서비스)	44	42%
문화홍보활동(지역축제)	29	28%
음식관련활동(모국음식식당)	25	24%
기타	6	6%
모름/무응답	1	1%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2016)

3)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어촌 다문화가정 지원체계 현황 및 실태

어촌 다문화가정 담당인력을 살펴본 결과 시군 단위는 직영 16명, 위탁 48명으로 인력구성이 되어 있으며 도 단위는 직영 14명, 위탁 0명이다.

광역 시도에서는 직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시군 단위는 직영에 비해 위탁의 비율이 높았으며 시군 단위의 담당인력이 위탁 또는 직영+위탁이 높은 이유는 기초지자체의 다문화가정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전문적 부분이 높게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3〉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 담당인력

단위: 명

구분	직영	위탁	직영+위탁
시군 단위	16	48	29
도 단위	14	0	7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2016)

정책 수행 상의 불편함을 살펴보면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은 비교적 불편함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저조한 참여율’ 또한 정책 수행 상의 불편한 부분으로 나타난 반면 ‘타부서와의 연계’나 ‘여성결혼이민자 중심의 정책’은 불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정책 수행상의 불편함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함	보통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인력부족	13	30	50	17	3
예산부족	13	35	36	25	4
타부서연계부족	3	22	54	32	2
상위기관연계부족	8	12	59	30	4
정책홍보부족	4	17	49	29	14
다문화가정부정적인식	10	31	46	20	6
저조한참여율	7	32	44	27	3
법제도한계	1	20	63	26	3
여성결혼이민자중심정책	3	17	54	32	7
기타	2	1	0	0	0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2016)

어촌 다문화가정 지원 제도/프로그램의 유무에 있어서는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제도/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다. 센터에서의 10%에 비해 담당 공무원의 응답 비율이 1%로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방문서비스 등 센터 접근성이 불리한 지역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되나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제도나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것은 공통된 결과였다.

〈표 3-35〉 어촌 다문화가정 지원 제도/프로그램 유무

구분	수	비율
있다	1	1%
없다	113	99%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2016)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이 어촌 다문화가정에서 이용하기에 약간 불리한 것으로 ‘보통’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불리한 편이다’가 27%, ‘불리하지 않다’가 17%의 비율이었다. 어촌 다문화가정의 정책 이용에 있어 ‘보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는 다른 결과로 서비스전달자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입장에서 느끼는 어촌 주민의 불편함과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느끼는 어촌 주민의 불편함 사이에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로 볼 수 있다.

〈표 3-36〉 정부지원정책의 어촌 다문화가정 이용 불리함

구분	사례 수	퍼센트
매우불리	4	4%
불리	31	27%
보통	53	47%
불리하지 않음	19	17%
전혀 불리하지 않음	6	5%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2016)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에 있어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 또한 ‘보통’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필요’가 36%, ‘불필요’가 13%의 비율이었다. 이 같은 응답은 정부 지원정책의 어촌 다문화가정 이용 불리함과 유사한 형태로 어촌 다문화가정의 여건을 도시나 농촌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37〉 어촌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필요성

구분	사례수	비율
매우필요	10	9%
필요	36	32%
보통	52	46%
불필요	13	11%
전혀 불필요	3	3%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2016)

□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실태

다문화 관련 정책사업 수행여부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의 결과로 ‘한국어 교육’과 ‘상담 및 지원’ 등은 비교적 원활한 정책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경제지원’ 및 ‘주택지원’ 사업의 비율은 비교적 낮았다.

〈표 3-38〉 다문화 관련 정책사업 수행여부

구분	수행	미수행	구분	수행	미수행
한국어교육/통역지원	114	0	여가/문화 활동 지원	110	4
한국문화 체험 및 교육	111	3	직업훈련, 취업상담/알선	104	10
국적취득지원	95	19	자녀양육	103	11
성/가정 폭력상담 및 지원	113	1	자녀교육지원	114	0
법률상담지원	104	10	직접적 경제지원	36	78
결혼이민자자조모임운영	114	0	주택지원	36	78
건강/의료지원	106	8	한국인대상의다문화인식교육	113	1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2016)

□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 중에서는 ‘어업활동 시 자녀 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어촌계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제고’가 다음이었다. 반면 ‘수산업업인 후계자 양성’ 및 ‘어촌특성반영 신규 사업 발굴’의 응답률은 낮았다.

어촌 경제활동의 특성상 자녀의 돌봄 시간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판단되며 기존의 수산·어업과 관련된 정책 필요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39〉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

구분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 불필요
어업활동 시 자녀 돌봄 서비스	30	47	29	7	1
수산업관련취업알선	25	38	38	11	2
수산업인후계자양성	12	29	64	7	2
어촌계대상다문화인식개선제고	27	42	36	6	3
결혼이민자의안정적정착	23	48	36	5	2
부처기관연계정책효율성강화	17	47	39	10	1
어촌특성 반영 신규 사업 발굴	15	39	45	14	1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2016)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연계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촌계 교육을 통한 지역인식의 변화’가 우선시 되었으며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방문서비스의 강화’가 비교적 높은 반면 ‘어촌지역을 위한 거점 설치’는 낮았다.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인식 변화에 대한 응답이 높은 이유는 어촌 사회의 폐쇄적 특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전환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정책적 주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40〉 어촌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연계방안 필요성

구분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 불필요
어촌 내 지역거점 설치	9	29	32	35	9
지역수협 연계 어촌서비스 강화	12	41	45	14	2
방문서비스강화	17	42	41	13	1
어촌계 교육 통한 지역인식 변화	21	44	32	14	3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2016)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 경제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는 ‘통번역서비스 등의 언어 관련활동’이 가장 높았으며 ‘수산물가공단지 등의 취업’이 다음이었다. ‘어촌부녀회 활동’ 및 ‘음식문화 등 식문화 활동’은 비교적 낮았다. 통번역서비스의 비율이 높은 것은 결혼이민자의 언어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 다만 통번역에 대한 고등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는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단순작업인 수산물가공단지 등의 취업 또한 쉽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1〉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역량 발휘 가능성

구분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통번역서비스 등 언어관련 활동	20	55	29	7	3
지역축제 등 문화홍보 활동	18	51	35	8	2
음식문화 등 식문화 활동	13	44	48	8	1
수산물가공단지 등 취업	18	46	42	7	1
어촌부녀회 활동	15	40	46	11	2
기타	2	2	0	0	0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설문조사(2016)

4) 소결

□ 센터 대상 설문조사 분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정책은 어촌 다문화가정이 이용하기에 불리하며, 정책 필요성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 다문화가정의 불리한 주요한 원인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낮은 접근성이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교통수단의 제공 또는 자동차 면허 교육 등의 제공 등 기존의 지원정책의 강화와 더불어 어촌 지역의 공부방 등을 제공하는 추가적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거점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으며 어촌지역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어촌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인력, 예산의 증대로 정책지원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책적 대상을 어촌 다문화가정으로 했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정책적 지원 사업 및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으로는 자녀교육 및 교육지원 방안이 우선시 되었으며 이후 어촌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1차적 지원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확대를 통해 어촌 다문화가정의 통합적 지원정책이 개발의 필요성이 높다.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 지역연계 지원방안으로는 기존의 ‘방문서비스 강화’를 통한 어촌의 지역적 불리함과 낮은 접근성을 상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라고 인식이 높았으나 현재의 보건복지부 정책 및 농촌 및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차별문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역할 가능 분야로는 통번역 서비스가 우선시 되었는데 결혼이민자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모국어를 활용한다는 점과 다른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에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분석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정책은 어촌 다문화가정이 이용하기에 불리하며, 정책 필요성의 수준은 보통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무원과 센터 실무자 간 인식 차가 나타나는데 주요한 원인으로는 서비스 전달자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입장에서 느끼는 어촌 다문화가정의 서비스 이용 불편함과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느끼는 어촌 다문화가정의 서비스 불편함 사이에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정책 수행상의 불편함에 있어 예산, 인력 이외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보수적인 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 지역연계 지원방안에서의 응답과 같은

내용으로 지역인식 변화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전환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관련 교육 강화가 한 번 더 강조되었다.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통적인 의견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어촌 경제활동의 특성상 자녀의 돌봄 시간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역할 가능 분야 또한 센터와 같이 통번역 서비스 비율이 높았으며 이를 위한 고등교육의 연계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방향 심층분석

1) 심층분석의 개요

□ 심층분석의 목적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서는 현행 다문화가정 정책에 대한 정책 입안자부터 중간정책 집행자, 정책 서비스 전달자까지의 의견을 모아 어촌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심층분석을 위한 집단 면접

심층분석을 위한 집단 면접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 기초지자체, 연구기관,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2016년 9월 6일 대전에서 실시하였으며 이후 의견서를 통해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3-42〉 심층분석 논의 사항

내용	
주요 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책 필요성 확인(참석자별) -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지향점(기본방향) -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방안(법제/지역/대상/지원체계 구축/활용) - 다문화가정 정책의 특화(지역별, 대상별, 어촌계별) - 특화정책 수립 가능성 및 실행방안
기타 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및 어촌과 관련된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아이디어 -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촌의 잠재 제약 및 촉진 요인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접근성 및 실효성 문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어촌어항협회·수협·어촌계 간 정보교류

2) 다문화가정 심층 분석 결과

(1) 현 정책에 대한 입장 및 정책의 필요성

□ 보건복지부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은 농촌 및 소도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어촌 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는 상황이며, 그로 인해 어촌 및 어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제시의 필요성은 높다.

□ 지자체 공무원

어촌의 활동은 어업 활동을 주로 함에 따라서 주거공간과 장소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부족으로 언어구사 능력이 떨어지며 어업활동은 물때에 따라 활동함에 따라서 일상생활의 경제 활동이 불규칙적으로 취학 아동의 학습준비가 소홀하다. 아이들의 학습 준비 및 언어능력 배양을 위한 전담 돌보미를 배치, 전담 보호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연구기관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그러나 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다문화 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연구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연구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이슈에서 나아가, 지원대상의 확대 및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지원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관련단체

아이들의 학습 준비 및 언어능력 배양을 위해 전담 돌보미를 배치하는 다문화전담 아동보호사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찾아가는 교육서비스·일자리+교육 체험가이드 등으로 문화 복지 정착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3-43〉 현 정책에 대한 입장 및 정책의 필요성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및 소도시 위주 어촌은 누락 •어촌 및 어업의 특수성이 반영필요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제시는 필요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활동에 따라 일상생활이 불규칙 •취학아동의 학습준비가 소홀 •취학아동을 위한 전담 돌보미, 보호사 제도
연구기관	관련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 관련 연구도 수행 •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및 관련 연구는 필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지원대상의 확대 및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교육서비스·일자리+교육 체험가이드 등으로 문화 복지 정착에 노력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방향 심층분석 자료(2016) 재구성

(2)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지향점

□ 보건복지부

어촌 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책지원대상이 명확히 정해져야 정책의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을 고려한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내 결혼 이민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배우자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자체 공무원

어촌은 섬과 자연부락 단위 마을로 구성되어 있어 다문화가정 및 가족 간 교류가 부족으로 인한 소외감이 증대되고 있어 어촌 다문화가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부모 형제자매 등 친인척을 초대하여 경제활동 등 가족 간 친밀한 가족 공동체 구성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연구기관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이 어촌 다문화가족에 스미지 못하는 지역적, 지리적 특수성이 있다면, 여기에 어떠한 서비스와 대책이 필요한지 연구가 필요하다. 어촌지역 다문화가족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욕구를 파악해서 정책 지향점 설정이 우선 되어야 하고 지리적으로 쉽지 않고 고립되기 쉬운 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하다. 어촌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도 함께 고민, 여성이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고려한 자녀 돌봄 지원 및 육아정보 공유 등의 정책적 지원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관련단체

결혼이민자는 어업활동의 전문 지식이 없어 경제적 도움이 되고 싶어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어업활동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교육체험가이드 등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3-44〉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지향점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 • 정책지원대상 명확 •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을 고려한 정책방향 • 자녀, 배우자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및 가족 간 교류가 부족으로 인한 소외감 증대 •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부모 형제자매 등 친인척을 초대 지원
연구기관	관련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 다문화가족 서비스욕구를 파악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교육 관심 필요 • 자녀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 자녀 돌봄 지원 및 육아정보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어업활동, 경제 자립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교육체험가이드 필요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방향 심층분석 자료(2016) 재구성

(3)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방안: 법제/지역/대상/지원체계 구축/활용 등

□ 보건복지부

결혼이민자의 단계별로 차별화된 정책도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혼이민자가 이주해서 정착한 것도 이미 십수 년이 지났으므로 정착에 성공한 다문화가정부터 이제 막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가정까지 다문화가정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만큼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역별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수협중앙회 지역 조직, 어촌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어촌계별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지자체 공무원

어촌의 특성상 다문화가정 수가 적고 아이들의 수도 적고 학교 등도 원거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주가정의 국적이 다양하여 상호협력이 떨어지고 문화의 차이에 의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실정이 있어 다문화 이주가정에 대한 1 대 1 보호사 운영과 같이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 연구기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촌계, 수협 등 마을단위의 공동체와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제체의 구축이 필요한데 다문화가족 자녀 돌봄, 육아 등에 있어서 어촌계,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존의 지원서비스가 현실적으로 닿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을 공동체를 통한 정서적, 물리적 자조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문화 수용성 및 사회통합을 제고할 수 있다.

□ 관련단체

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수협 등을 통한 다문화가정 현장 어업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협중앙회 연수원 등을 이용하여 다문화여성 교육지원 및 여성어업인연합회 등을 통한 다문화여성어업인 권익신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표 3-45〉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방안: 법제/지역/대상/지원체계 구축/활용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의 단계별로 차별화된 정책 다문화가정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만큼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 지역별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수협중앙회 지역 조직, 어촌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 1 다문화 이주가정에 대한 보호사 운영,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연구기관	관련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계, 수협 등 마을단위의 공동체와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제체를 구축 마을 공동체를 통한 다문화 수용성 및 사회통합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수협 등을 통한 다문화가정 현장 어업교육 등 지원 다문화여성 교육지원 및 여성어업인연합회 등을 통한 다문화여성어업인 권익신장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방향 심층분석 자료(2016) 재구성

(4) 다문화가정 정책의 특화: 지역별, 대상별, 어촌계별

□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의 원주민에 대한 지원 및 교육도 필요할 것이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관련 교육을 어업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어촌계별 실태조사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 지자체 공무원

베트남, 태국 이주가정의 이주자들이 경제활동 등 돈을 버는 데 열중하여 아이들의 육아가 소홀한 면이 있는데 국적별 특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이주가정의 어투가 다르다 하여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하겠다.

□ 연구기관

다문화가족 내 가부장적문화를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로 개선하기 위해 여성만이 아닌 남성과 여성이 육아,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형태, 시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족 자녀 방과 후 공부방 지원, 육아 돌봄 지원에 있어서 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관련단체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며 언어소통, 아빠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다문화 이주가정에 대한 언어교육 지원, 다문화 자녀와 함께 하는 다문화가족 체험여행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표 3-46〉 다문화가정 정책의 특화: 지역별, 대상별, 어촌계별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원주민에 대한 지원 및 교육 필요 • 어업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반영 고민 •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별 특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 • 지역의 교육 필요성
연구기관	관련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만이 아닌 남성과 여성이 육아, 학부 모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 • 근로형태, 시간의 특수성을 고려 필요 • 어촌 다문화가족 자녀 방과 후 공부방 지원, 육아 돌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대한 언어소통, 아빠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 등 미흡 • 다문화 이주가정에 대한 언어교육 지원, 다문화 자녀와 함께 하는 다문화가족 체험 여행 지원이 필요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방향 심층분석 자료(2016) 재구성

(5) 특화정책 수립 가능성 및 실행방안

□ 보건복지부

어촌은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지원센터 등을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데 어업의 특성상 육지를 떠나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므로 고정적인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힘들며, 특히 자녀교육 등에 애로가 발생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참여가 우선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가정 내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여성어업인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지자체 공무원

부부의 나이차이가 많이 나면 세대차이가 발생하고 경제적 동반자보다는 아이 엄마의 역할만 강조되는 경우도 있다. 다문화 이주가정의 구성 시 연령 차이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연구기관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어촌계, 수협 등 어촌 마을의 특수성을 반영

한 조직의 적극적 연계를 도모하며 어촌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 관련단체

수협에서 실시중인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사업은 현재 신청하는 조합에 한해 1가정을 선정(최근 3년 이내 수협 등 타기관의 모국 방문지원 미수혜 가정) 모국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예산 확대를 통한 다문화가정 부모 및 가족의 한국방문 초청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표 3-47〉 특화정책 수립 가능성 및 실행방안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참여 필요 다문화가정 내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여성어업인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이주가정의 구성 시 연령 차이를 적극 검토 요망
연구기관	관련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어촌계, 수협 등 어촌 마을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달체계와의 적극적 연계 도모 어촌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협에서 실시중인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사업 시행중 다문화가정 부모 및 가족 한국방문 초청사업 추진 필요

자료: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방향 심층분석 자료(2016) 재구성

3) 소결

□ 현 정책에 대한 입장 및 정책의 필요성

현 정책에 대한 입장은 보편적으로 운영과 연구는 잘 진행되고 있으나 어촌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개발과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어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도시 및 농촌에 비해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촌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지향점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지향은 어촌지역의 특수성 중 어업행위와 관련한 물때, 시간적 제약 및 일정하지 못한 노동시간과 같은 일반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어촌의 실태를 반영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지리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어촌의 특성상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한글교육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지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방안: 법제/지역/대상/지원체계 구축/활용 등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은 단계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며 결혼 이민자의 입국시기와 체류기간별로 서로 다른 자원욕구를 가지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대별 스펙트럼이 넓어짐에 따라 지원 내용도 다양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어촌계 또는 수협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편성과 더불어 마을 공동체를 통한 정서적 물리적 자조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다문화가정 정책의 특화: 지역별, 대상별, 어촌계별

어촌 다문화가정은 어촌계라는 공동체적 특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어촌계별 실태조사를 통한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분석을 우선하여 어촌계 중심의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 다문화가족 내 가부장적 문화를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로 개선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만이 아닌 남성과 여성의 육아,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 특화정책 수립 가능성 및 실행방안

특화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센터 등의 이용에 한계가 있어 어촌을 위한 추가적인 특화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촌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 및 데이터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어촌관련단체인 수협에서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해수부가 연계하고 수협을 통한 정책적 실현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제4장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제1절 정책의 필요성

1. 어촌인구 구성의 변화에 대한 대응

수산정책 대상 공간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장, 수산물을 양륙하여 위판하고, 수산물을 생산하는 중요한 생산 수단인 어선을 정박하는 어항, 그리고 어장과 어항을 보전하고 이용하는 생산주체인 어촌주민이 거주하는 어촌이다. 어촌주민은 수산정책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수산정책의 효율적 추진 여부는 어촌주민의 능력과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어업인구는 약 13만 명에 불과하고, 어촌의 고령화율도 약 40%에 이르렀다. 어촌의 높은 고령화율은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부족현상을 촉진하여 어촌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촌인구의 노령화는 수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수산업은 물론이고 어촌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성 부족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어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노령화율의 증가는 어촌의 정주환경의 개선, 어촌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산정책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 붐 세대는 물론이고 청장년층도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어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율 증가에 대한 정책 추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어촌에 거주하는 미혼 청장년의 결혼은 어촌의 노령화율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이들의 결혼은 애 울음소리를 듣기 힘든 어촌에 어린애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여성의 결혼이주로 여성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여성 결혼이민자로 형성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은 수산정책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어촌인적 자원으로서 역할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어촌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정책도 수산물 생산 중심인 생산자 지향 정책을 지양하고 있다. 수산정책의 변화 중 대표적인 것이 어촌 6차 산업화 정책이다. 어촌 6차 산업화는 어촌의 다양한 자원의 활용과 결합, 그리고 공간의 활용과 결합을 통하여 추진하는 정책이다. 다양한 자원과 공간의 결합 주체는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6차 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주민의 경험과 지식, 구성원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어촌의 다양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어촌의 인적자원의 육성은 어촌의 다양한 자원과 공간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어촌주민의 자질을 높여가는 것과 함께 외부 인적자원의 어촌으로의 유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어촌주민과 서로 다른 문화, 경험과 지식 등을 가진 젊은 여성 결혼 이민자들로부터 어촌의 미흡한 인적자원을 보완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어촌주민과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결혼이민자가 어촌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다문화가정 정책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일방적 지원 정책으로 추진하는 다문화가정 정책에서 탈피함으로써 결혼이민자들의 능력 개발과 활용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높은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어촌 출신의 젊은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들이 어촌을 떠나지 않고 어촌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때 결혼이민자들의 자녀들은 어촌경영의 후계자, 더 나아가 어촌발전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3. 어촌 개방화를 위한 매개체 역할

어촌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다. 그리고 규제 중심의 법·제도에 따라 어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어장과 어항의 이용에 대한 우선권이 어업인에게 주어져 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 및 법·제도적 영향으로 어촌주민은 배타적 성향이 높은 편이다. 개방화 시대에 어촌의 배타성은 어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어촌주민의 배타성은 어촌의 다양한 자원과 공간의 제한적 활용으로 연계되며, 외부인의 어업에의 진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도시인의 귀어·귀촌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도시의 학교로 나가 그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한 어촌출신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촌인에게도 어촌주민의 배타적 성향은 귀어·귀촌의 걸림돌이 되는 실정이다. 노령화가 진전된 어촌은 어촌의 미래 비전에 관심이 낮은 노인층의 비중이 높아 외부로부터 인적자원의 유입에 관심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촌의 노인들은 어촌을 떠나지 않고, 어촌을 지키고 있는 미혼의 청년층의 결혼은 그들의 큰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들은 어촌으로의 유입되는 외부인으로서 결혼이민자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는 외부 인적자원의 유입에 대한 어촌의 배타적 성향을 낮출 수 있는 요소이다.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의 효율적 추진은 어촌의 개방을 유도하는 촉매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4. 어촌 구성원으로서 삶의 질 향상 정책 대상

농어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와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 경제 침체 우려에 대응하고, 농어촌 정주 여건 및 경제 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기 위하여 2004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

원회를 두고 있다. 도심과 떨어져 있는 어촌의 지리적 여건과 어촌주민의 감소 등으로 어촌의 정주환경과 복지 환경은 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따라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업인은 물론이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원천이 되고 있다.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어촌공동체, 도서 어촌과 연안 어촌 등의 어촌 공간, 어업인의 소득,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어업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은 어촌주민 중에 열악한 정주환경과 낮은 소득 계층에 속하는 비중이 높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제2절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1. 정책목표

세계 무역 자유화, 다국적 경영 등으로 세계 경제는 개방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국의 경제는 다른 나라의 경제 여건에 직접 혹은 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 여건으로 각국의 주가지수는 동반 상승 혹은 동반 하락 현상을 나타낸다. 경제의 주체는 사람이다. 따라서 사람의 이동도 국경을 넘어 빈번해지고 있다.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도 다국적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다문화가 각국에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형성 배경이 서로 다른 다문화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결혼이민자에 의한 다문화가정이다. 결혼이민자 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농어촌이다.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열악한 환경은 농어촌 청년들의 미혼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어촌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다. 정부에서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각 분야가 다른 부처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어촌 삶의 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 어촌 삶의 질 향상은 지리적 특성, 어촌주민의 계층적 특성, 어촌주민 소득의 특성, 어촌주민의 태생적 특성에 따라 어촌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적 수단이 각각 독립적이며, 상호 보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어촌은 지리적 여건과 어업의 특성이 다른 지역과 상이하기 때문에 어촌 환경에 적합한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경제적 수요의 변화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부창출 공간으로서 어촌의 잠재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어촌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과 공간의 활용을 위한 수산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단순한 수산물 생산 기능에서 탈피하여 어장, 어촌, 어항 등의 공간과 그 곳에 존재하는 자원의 융·복합은 미래 수산의 비전을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수단 중의 하나이다. 수산자원, 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인적자원의

융복합은 수산업과 어촌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융복합의 주체는 사람이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사고 등을 가진 사람들이 어촌과 수산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 귀어·귀촌인은 물론이고 결혼이민자도 수산업과 어촌 자원의 융복합을 위한 인적자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어촌 다문화가정을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적자원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고유한 문화적 경험과 지식을 다양한 수산정책 수단과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이들의 경제적 활동은 물론이고 자존감을 고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활용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목표는 ‘어촌 다문화가정의 지원과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한다.

2. 기본방향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은 보건·복지, 교육여건,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등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어촌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습득, 다른 문화 적응, 경제활동 등을 비롯한 자녀 교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은 어촌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이 해양수산부의 독립적인 정책이 아니라 다른 부처의 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도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해양수산부의 정책 마련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어촌 다문화 정책의 추진은 어촌사회에 적응하고 어촌 공동체의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효율적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촌 다문화가정 대상 정책 수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 중에서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어촌 다문화가정의 특성과 문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자원 대책을 마련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어촌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생활하는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원 대상으로서 어촌 다문화가정을 인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방향이 지원 일변도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더 큰 지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결혼이민자는 출신국의 다른 문화, 경험 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고유한 문화와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득복지과만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 수단과 인적자원으로서 활용 정책 수단과 관련이 있는 업무 담당 부서와 연계하여야 한다. 어촌 다문화가정의 지원과 활용을 위한 정책 수단이 소득복지과의 정책 추진은 물론이고 타 부서의 업무와 연계한 칸막이 없는 정책 추진으로 어촌 다문화가정의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어촌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수단을 현안문제는 물론이고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어촌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의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어촌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이들이 어촌에서 직업을 갖게 하는 정책 수단을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촌 후계자로 키우기 위한 어촌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장기적인 교육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문화 정책의 집행 기관은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정책 수단의 집행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촌사회의 특성, 어업의 특성 등을 반영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어촌은 국토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읍내에 소재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어촌 다문화가정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정이 정부의 다문화가정 정책의 수혜자로서 접근이 용이하고, 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 수단을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3절 정책과제

1.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

□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 조사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어촌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어촌 다문화가정에 관한 실태는 거의 조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영조직 혹은 위탁기관으로 설립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문화지원센터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 혹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직업에 따른 다문화가정을 분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어촌 다문화가정은 국토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1차 산업인 어업의 특성으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정 보편적 정책은 물론 특이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계량적 통계와 정성적 자료를 포함한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어촌 다문화가정 수,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 연수, 자녀 수 등 계량적 통계와 함께 결혼이민자의 특기,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능력, 소득원, 고충 등 정성적 자료에 대한 조사도 수행하여야 한다.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 조사를 토대로 정책수단을 개발함으로써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보의 효율적 분산체계 마련

인터넷의 활성화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 ‘정보의 홍수’라는 단어는 넘쳐나는 정보가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정보의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의 우려를 나타낸다. 즉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 없거나 오히려 잘못된 의사결정을 이끄는 정보를 가려내는 능력과 지식이 없을 경우에 정보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의 홍수뿐만 아니라 정보의 불균형도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전에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정보 홍수의 시대에도 정보의 불균형은 존재한다. 다만 정보 불균형의 시간이 줄어들었을 뿐이다. 사회적 지위, 경제적 차이, 정보 분산 주체의 편향성, 정보접근 수단의 차이 등은 정보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요인에 속한다. 정보 불균형은 리스크와 편익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이로 인하여 양극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어촌 다문화가정은 지리적 여건과 일정하지 않은 노동의 여건으로 지역 중심지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보다 다문화 관련 정보를 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부부 여행 프로그램처럼 인기 있고 참여 가정 수가 제한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모국방문의 경우에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담당자의 정보 분산 방법에 따라 정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 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보 분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그리고 어촌계 등을 연계한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 분산체계를 갖추어 정보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 분산체계의 구축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다문화 관련 업무의 연계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촌 인구감소와 노령화는 어촌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어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상관관계가 높다. 어가소득이 도시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어촌 정주환경도 상대적으로 낮아 청장년층이 어촌을 떠남에 따라 어촌 노령화는 급속하게 진전되어 벌써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어촌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어촌발전을 위한 창의성과 열정도 떨어지고 있다. 어촌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하여 어촌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어촌의 인구유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귀어·귀촌인의 증가는 어촌 인구유입의 대표적인 것이다. 베이비 붐 세대의 귀어·귀촌은 물론이고 청장년층의 귀어·귀촌이 늘어나고 있다. 귀어·귀촌인이

어촌에 정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어업의 진입장벽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얻기 힘들고, 어촌주민의 배타적 성향으로 어촌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 도시인들에 대한 이기적 성향에 대한 편견이 어촌주민의 배타적 성향을 나타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이들이 어촌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이웃주민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부모와 남편에게도 있다. 따라서 화목한 다문화가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이웃 주민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어촌은 농촌과 다르게 현금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권의 소유와 관련한 잘못된 인식으로 다문화가정의 불화가 야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촌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 과정에 결혼이민자 이해하기(가칭)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어촌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과제

□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보완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다문화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과 연관성이 높다. 결혼이민자의 낮은 한국어 구사능력으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부모와 남편은 물론이고 자녀와 결혼이민자 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결혼이민자이지만, 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도 크다. 또한 자녀의 언어능력의 발달이 더디고, 자녀가 학교 교육으로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시점까지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을 경우에 자식과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혼이민자는 마을주민과 어울리지 못함으로써 외로움에 힘들어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일자리를 구함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교육의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어촌은 지리적 한계로 인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어촌 다문화가정에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그럼에도 예산의 제한과 교육 기회 균등 지침에 따라 한국어 교육기간이 짧아 한국어 습득에 한계가 있다.

한국어 교육 방문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가정주부, 며느리, 어머니로서 미숙한 부분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양수산부 혹은 지구별 수협이 여성도우미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어촌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어촌은 다른 지역보다 교육환경이 열위하기 때문에 어촌 다문화가정은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촌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어업의 특성상 부모와 규칙적인 만남이 어려워 부모와 교류를 통한 교육 기회가 불확실한 편이다. 또한 교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읍내의 접근성이 떨어져 2차 교육기관의 이용이 불편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어촌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가정 방문 교육프로그램을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방문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촌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있다. 어촌의 인구 감소율을 줄이고, 어업경영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인 후계자를 지정하여 금융적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어촌의 청소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어업인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 프로그램의 대상자의 수산관련 학교 진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어작업 및 수산가공업 관련 기술 훈련 지원

소규모 어선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연안어업 선주인 다문화가정은 부부 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어선어업의 조업활동은 안전사고와 어작업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안 어업에 종사하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어작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육지에서 그물 수선작업, 미끼 끼는 작업 등 교육을 통하여

작업재해 위험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작업 효율성을 높여 작업으로 인한 부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어촌에는 수산물을 가공하는 공장이 있다. 이러한 저차 수산물가공은 수작업으로 수산물을 가공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이민자가 수산가공공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가공작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작업 효율성을 올림과 동시에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어업 공동체의 어촌 다문화가정 지원

어촌 다문화가정은 마을의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마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 간에 서로 소통한다. 어촌 다문화가정의 지원은 개별 세대의 지원보다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어촌 혹은 어업 공동체 사업 중에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토대로 지원사업을 선정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어촌에는 다양한 어업 공동체가 있다. 마을어장의 공동 이용의 주체인 어촌계, 영어법인, 어업별 협회 등이 대표적인 어업 공동체다. 참여하는 어업의 동질성과 다문화가정의 동질성으로 다문화가정들 간의 교류가 다른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잦은 편이다. 어업 공동체 내의 다문화가정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으로 다문화가정 간에 상부상조하는 풍토를 만들어가야 한다.

□ 어촌 다문화가정 화합 프로그램 지원

어촌과 어업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가족 단위의 참여비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촌체험 마을 찾아가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 찾아가기 프로그램에 어촌 다문화가정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 가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갯벌 올림픽(가칭)’에 각국 대표로 어촌 다문화가정을 참여시킨다. 갯벌에서 경기는 손과 발은 물론이고 얼굴과 몸에도 갯벌이 묻어 피부색이

똑같이 되어 서로 거리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구성원과 다문화가정 간의 유대관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집안에 주로 있는 결혼 이민자가 세상으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3. 어촌 다문화가정 활용을 위한 과제

□ 전통문화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문화는 삶의 흔적이다. 민족, 국가, 지역, 학교 등 크고 작은 집단은 독특한 문화가 있다. 문화는 집단의 특성으로서 집단의 소속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자부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누군가 ‘중진국이 선진국이 된 사례가 없다’고 했다. 경제적 발전은 가능할지라도 문화수준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미흡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내 여행이건 해외 여행이건 여행은 여행객이 방문하는 지역 혹은 국가의 문화를 접하고 느끼는 것이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일 것이다.

어촌주민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어촌주민들이 다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촌 다문화가정이 모국의 전통문화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촌주민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사회참여에 소극적인 다문화가정이 자부심을 갖게 하여 지역주민과 소통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어항을 지역축제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축제의 프로그램 중에 다문화가정이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거나 명절에 어촌복지회관에서 다문화가정과 함께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서로 화합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음식문화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음식은 삶의 세 기둥인 의·식·주 중에 하나이다. 음식문화는 지역 혹은 국가의 지리적 특성, 기후, 사람의 품성, 산업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르다.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라는 어느 셰프의 책 제목처럼 음식은 신체는 물론이고

정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음식문화는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갈등 중에 하나이지만, 배우자 나라의 음식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남편은 갈등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평소에 먹지 못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음식문화를 느껴 서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특히 어촌은 계절별로 다른 수산물을 생산하여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어항에서 수산물 축제를 개최하는 연안 기초지방자치단체, 혹은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등이 있다. 이러한 수산물 축제 기간 중에 다문화가정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축제 참가자들에게 다문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어촌관광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어촌체험관광의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음식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문화가정과 어촌주민, 나아가 체험객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친인척의 어업 종사 여건 조성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의 모국 방문과 경제적 원조 등이 관심사이다. 모국을 떠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관심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고향을 그리는 향수병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겪을 수 있는 병이다. 그럼에도 모국을 방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저개발국 출신이 대부분인 결혼이민자의 모국 방문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물론이고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이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일부분만 모국방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것도 1회로 제한된다.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는 고향을 그리는 향수가 짙어질 수 있다. 모국으로부터 부모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하는 것도 결혼이민자의 향수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다문화가정이 어선어업에 종사할 경우에 친정아버지가 조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기적으로 부모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친정아버지는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사위는 선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는 주기적으로 부모를 만날 수 있어 고향을 그리는 아픔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민자의 친인척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이들이 선원으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어업경영 참여 기반 조성

결혼한 지 10년이 넘는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경험과 자신의 자질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배우자가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자는 배우자가 바다에서 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장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배우자가 수산가공업을 경영할 경우에 결혼이민자가 유통을 책임지는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배우자가 수산물 생산 혹은 수산물 가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는 경영의 한 분야를 맡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영 욕구가 있거나 자질이 보이는 결혼이민자에게 경영교육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외국 선원 혹은 결혼이민자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이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어촌 공동체의 여성 도우미 역할 부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어촌은 노령 여성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어촌에서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어르신들의 모임공간인 어촌복지회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젊은 여성 도우미로서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를 배치하면 어르신과 결혼이민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어촌 노령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결혼이민자는 도우미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르신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어촌복지회관에서 활동으로 신뢰를 얻게 될 경우에 어촌 부녀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어촌 부녀회의 활성화는 어촌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을 도시와 자매결연한 곳으로 수산물을 직거래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경험이 많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는

어촌계의 사무장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특히 어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어촌계의 경우에 사무장 역할은 많은 장점이 있다. 음식문화 및 전통문화 관련 상품 개발과 소개를 통하여 어촌체험 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에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어촌의 인적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장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실행방안

제1절 관련법령 개선

□ 다문화가정 개념의 법적 정립을 통한 다문화정책 대상 확대 필요성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정책 대상은 ‘결혼이민자 등’과 ‘아동·청소년’이다. 그러나 어촌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가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족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가정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개념의 법적 정립을 통해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발굴함과 동시에 다문화정책을 위한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다문화의 정책대상을 기존의 다문화가족과 함께 마을공동체, 지역사회, 여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들로 확장하여 적극적으로 미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소관부처로 해양수산부 참여

13개 중앙행정기관 및 법원,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2017년까지이므로,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소관부처로 해양수산부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소관부처 참여는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 및 타 부처 연계를 통한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실행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

□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중 해양수산부와 연계 가능한 정책 발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상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정책, 계획 및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해양수산부가 주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어촌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임에도 주관부서가 아닌 까닭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해양수산관계법령 연계·적용 검토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정책 실행의 필수조건 중 하나다. 따라서 해양수산관계법령 가운데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의 상위법령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련조항을 신설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조항을 연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3차 농어촌 삶의 질 기본계획」과 연계 사업 발굴 및 확대

「제3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은 특히 불리한 지리적 여건에 놓여 있는 어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연안시군 지자체 차원의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조례 입법 검토

어촌 다문화가정이 살고 있는 연안시군 지자체 차원에서 각 지자체 내 어촌 다문화가정의 상황, 정책욕구, 여건 등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의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직접적 지원으로 인한 혜택뿐만 아니라 지역맞춤형 특화과제 발굴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제2절 관련제도 개선

□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 파악을 위한 체계 마련 필요

천편일률적 다문화가정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의 여건에 부응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는 현장의 실태에 대한 천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데이터에 근거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추진할 체계 마련도 요구된다.

□ 어촌 공동체가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어촌은 어촌계 등 특유한 공동체문화를 가지고 생활이 영위되는 공간이므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제도적 접근 역시 개별 다문화가족 구성원에만 한정되어서는 정책효과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어촌계 단위의 다문화가정 정책사업 참여나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결혼이민자 친인척의 어업종사여건 조성 등 공동체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야 한다.

□ 경제적·비경제적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지원 필요

어촌 다문화가정은 지역별, 해역별, 종사어업별 등 여러 특성에 따라 다양한 여건에 처해 있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 역시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만이 아니라 비경제적 지원이 더 시급한 곳도 존재한다. 특히 물때 등 시간에 민감하고 사시사철 장시간 노동을 필요로 하는 등 개인적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어업 특성상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책대상자별 접근 및 실행방안 마련

자신이 어촌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인지, 배우자 및 친지인지, 자녀인지 혹은 공동체인지에 따라 처한 여건과 필요한 정책서비스가 다를 것이므로 정책대상자별로 차별화된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절 투자계획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예산이 필요하다.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을 위한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별 투자계획을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과제인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와 어촌 다문화가정 D/B 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은 신규로 확보하여야 할 예산이다.

어촌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과 어촌 다문화가정 활용 사업은 다문화가정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예산을 확보하거나 추진과제의 특성과 유사한 기존 사업에 추진과제를 포함하여 기존 사업의 범위를 확장시켜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어촌 다문화가정 이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의 교과 프로그램에 포함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어촌지도자협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한국어 방문 교육 프로그램은 여성도우미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한국어 방문 교육을 위한 강사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과 함께 결혼이민자가 주부, 엄마 등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촌 다문화가정 자녀가 어업인 후계자 양성 사업의 예비단계로 해양수산관련 학교에 진학하여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여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어촌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어촌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어촌의 평균연령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어촌 다문화가정은 어촌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어업 공동체 중심으로 어업 기술 혹은 어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투자할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는 클 것이다. 어촌 다문화가정은 어업 환경과 거주 여건 등으로 가족이 함께 가정을 떠나 즐기는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어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되어 어촌에서 가족 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표 5-1〉 투자계획

추진 전략	추진과제	투자계획(백만 원)							비고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어촌 다문화 가정 정책 기본 구축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200	100						
	어촌 다문화가정 D/B 구축			200					
	어촌 다문화가정 이해프로그램 운영		100	100	100	100			
어촌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한국어 방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50	50	100	100	100	100	
	어촌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50	50	100	100	100	100	
	어업공동체의 다문화가정 기술·경영교육 지원		100	100	100	100	100	100	
	어촌 다문화가정 화합프로그램 지원		50	50	50	50	50	50	
어촌 다문화 활용 사업	전통문화 활용 프로그램		30	30	50	50	50	50	
	음식문화 활용 프로그램		50	50	50	50	50	50	
	친인척 어업종사 인력 활용								제도개선 기술교육 프로그램 연계
	어업경영참여 기본 조성								경영교육 프로그램 연계
	어업공동체 복지개선도우미 프로그램		50	50	50	50	50	50	

어촌관광의 활성화로 어촌 혹은 어항은 축제의 공간, 나아가 관광 공간으로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전통문화와 음식문화는 축제와 관광의 중요한 콘텐츠이다. 따라서 어촌의 축제와 관광 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어촌 다문화가정을 축제와 관광의 프로그램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어촌의 노령화로 노인 복지가 어촌사회에 중요한 이슈이다. 어업인 복지회관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어촌의 노인들의 도우미로서 젊은 결혼이민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서 노인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거버넌스 체계 및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1. 거버넌스 체계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에 있어 현재의 구조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부처와 중앙부처의 정책을 수행하는 지자체 복지 관련 조직이 있으며 현장에서 다문화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의 다문화가정 정책은 특정 대상이 아닌 다문화가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수행하게 되는데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어촌 다문화가정은 어촌의 지역적 특성과 조업과 관련된 시간적 특성에 따라 다문화가정 정책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향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지역적으로 연안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된 조직을 살펴본 결과 정책의 전달자 및 관리 운영자적 입장에서 다문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있어 경직된 부분이 많아 지역적인 특성 및 다문화가정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적응이 더딜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계약직원들의 이직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담당 인력의 배치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직영과 위탁으로 구분되는데 직영은 조직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이 높은 반면 위탁은 서비스 전달에 좀 더 유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위탁운영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다만 직영과 위탁 어느 시스템을 도입하던지 가장 큰 문제는 담당 직원의 고유한 업무에 지속성이 중요한 요소로 다문화가정의 서비스 전달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식 등 노하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어촌 다문화가정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리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부방 등 지점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는 있으나 적극적인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업관련 단체 및 어촌계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관계부처의 협력체계 구축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많은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대부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어 어촌 특히 도서벽지에 거주하고 있는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서비스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각 센터의 기본사업들을 충실히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겠지만 어촌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어촌 다문화가정이 이러한 서비스의 혜택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보건복지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어촌지역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여성 어업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어촌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삶의 질 및 여성 어업인으로서 지원책 마련 또한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방문교육 서비스에 많은 요구가 있었다. 도서·벽지 지역 거주가정에 한해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에 관련한 방문교육 사업의 우선선정 대상이 되고 있다.²⁶⁾ 하지만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은 해양수산부의 정책적 지원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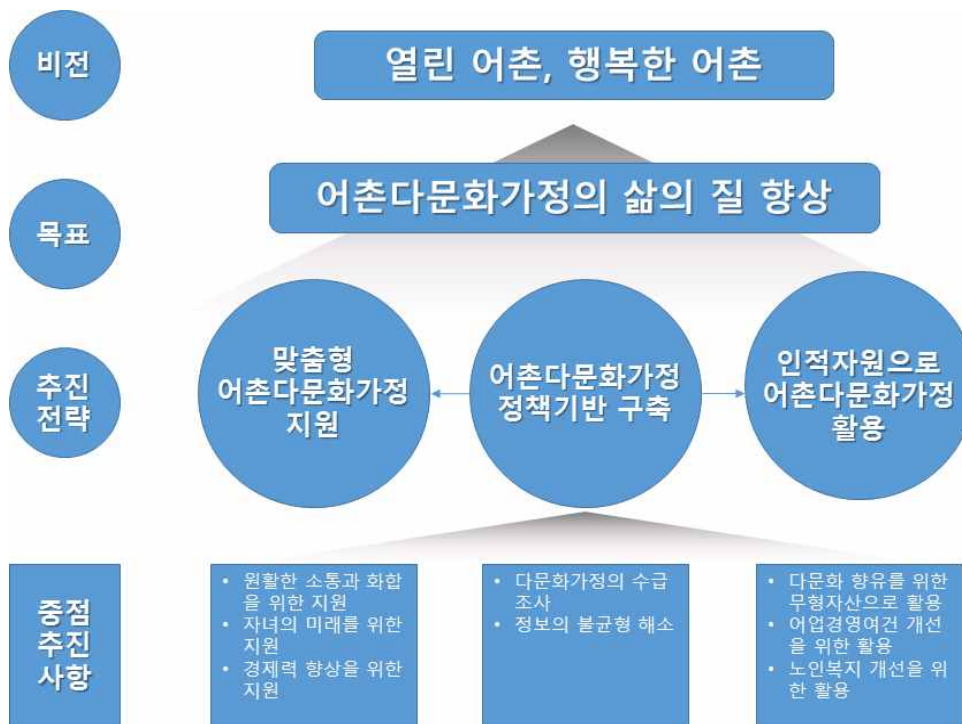
²⁶⁾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검색결과 재구성, 2016년 9월 29일 17시 13분에 접속, 다문화, 사회적응 지원 등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38&ccfNo=3&cciNo=1&cnpClsNo=1>

제5절 추진 로드맵

1. 로드맵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의 로드맵은 다음 그림과 같이 크게 비전, 목표, 추진전략, 중점 추진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비전은 ‘열린 어촌, 행복한 어촌’으로 설정하였다. 어촌은 지리적 위치와 규제 중심의 수산업법, 어장과 어항의 우선적 이용권 등으로 배타적 성향이 높은 공간이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배타적 성향으로 결혼이민자가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다문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열린 어촌, 나아가 행복한 어촌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비전을 설정한 것이다.

〈그림 5-1〉 어촌 다문화정책의 로드맵



2.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여러 가지 이유로 프로그램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어촌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기반 구축, 맞춤형 어촌 다문화가정 지원, 인적자원으로서 어촌 다문화가정 활용 등을 설정하였다.

어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해양수산부는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을 거의 추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먼저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정책수단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 정책수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어촌 다문화가정의 정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의 지원과 관련한 수요와 공급 조사와 다문화 가정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어촌 다문화가정은 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보완 혹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지원함으로써 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어촌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지원, 자녀의 미래를 위한 지원, 경제력 향상을 위한 지원 등을 어촌의 실정과 부합한 정책적 지원 수단을 중점적으로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끝으로 어촌 다문화가정의 지원과 함께 어촌 다문화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의 무형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도 필요하다. 어촌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령화로 어촌의 인적자원의 육성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어촌으로 유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정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 향유를 위한 무형자산으로 활용, 어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활용, 노인복지 개선을 위한 활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어업가구는 도시가구에 비하여 소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어촌 정주여건을 포함한 삶의 질도 낮다. 어촌은 인구가 점점 감소함과 동시에 어촌은 초고령화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작업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어업환경으로 어촌 다문화가정은 다문화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편익을 누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대부분은 이러한 어촌 다문화가정의 불리한 여건을 인식하고 있지만, 인적 및 예산 문제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어촌 다문화가정도 다문화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어촌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인터뷰한 어촌 다문화가정 중에 다문화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구성원 간의 소통을 통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촌계, 지역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협회 등 어촌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는 어촌은 다문화가정의 복지와 소득을 향상시키는 중간 조직체의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촌의 유지·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촌 다문화가정은 일방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 어촌의 잠재적 인적자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촌의 유지·발전의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인적자원의 부족이다. 결혼이민자는 어촌의 청장년들이 가정을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미래 어촌의 인적자원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의 차이는 갈등의 원인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결혼이민자 모국의 전통문화와 음식 문화 등은 어촌의 자원과 공간을 선택·조합하여 새로운 상품을 생산이 가능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의 활용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은 다문화가정 지원이라는 비용적 관점에서 벗어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이라는 관점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어촌정책과 수산정책을 추진하는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여성가족부의 예산과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어촌 다문화가정의 지원과 활용을 위한 정책 목표를 어촌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함으로써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에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정책적 제언

우루과이라운드, WTO, FTA, TPP 등의 단어에 익숙한 지 오래되었다. 경제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다국적 기업이 이제 낯선 기업 형태가 아니다. 이러한 경제 개방화는 국민의 구성 또한 다양화가 이루어져 다문화라는 단어도 익숙해졌다. 특히 단일민족이라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에 예외일 수 없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법률이 제정되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정책 집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의 낙후공간인 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으로 말미암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그러나 어촌 다문화가정은 어촌사회의 구성원으로 어촌이 당면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여성가족부, 나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정책 수단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가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을 수행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타적 성향이 강한 어촌의 개방의 물꼬를 트는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하나로서 어촌 다문화가정을 인식하여야 한다. 어촌은 다양한 자원이 있고 이들 자원을 활용하여 창출할 수 있는 국민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어촌이 낙후공간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어촌 발전이 더딘 원인 중의 하나는 어촌의 배타성이다.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촌의 공간은 물론이고 인적자원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촌의 인적자원 개방은 자본을 가진 민간투자자는 물론이고 다양한 자질과 경험을 갖고 있는 인적자원의 유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촌주민과 다른 특성을 가진 인적자원의 유입처로서 귀어·귀촌 가정과 다문화가정을 인식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주주의는 소수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로 연안 시장과 군수의 대부분은 어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포괄보조금제도로 선거권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어촌의 예산 집행이 줄어들기도 한다. 어촌의 소수에 속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도 적은 실정이다. 그러나 생산 공동체인 어촌계를 중심으로 생산활동과 사회활동이 이루어진다. 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무관심은 어촌사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어촌 다문화가정을 어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어촌 다문화가정이 어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어촌은 다양한 자원과 공간을 가진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 공간이다. 이러한 어촌의 잠재성은 어촌소득과 고용창출을 이끌 수 있는 무한한 자산이다. 창조는 자원과 공간의 선택과 조합으로부터 이루어지며, 선택과 조합의 주체는 사람이다. ‘사람이 정책이다’라고 하듯이 선택과 조합의 형태에 따라 창조의 가치는 결정된다. 동일한 자원과 공간을 선택·조합하는 사람이 서로 다를 때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어촌 다문화가정을 어촌 변화의 인적자원 중의 하나로서 인식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점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6월에 제정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위원회를 두고 법무처가 참여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 다문화가정의 정책도 넓은 의미에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어촌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은 열악한 경제 환경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의 학력도 낮아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을 어업인 복지 향상에 포함하여 복지정책 수단과 연계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다섯째, 해양수산부가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관할하는 주무부처로서 다문화가족 정책추진을 위한 예산의 대부분을 관장하고 있

다.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때 여성가족부와 중복예산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어촌 다문화가정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사업은 물론이고 해양수산물 수산 및 어촌분야 고유사업 중 어촌 다문화가정의 지원과 활용을 위한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어촌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현숙, 『문화주체로서의 이주민 지원 정책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김유경,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3.
- 김은영 외,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0.
- 박대식 외,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 박대식 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 박복순,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3.
- 박영준,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그 사례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통권 14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3.
- 설동훈 외,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라북도, 2015.
- 여성가족부, 『20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결과보고서 I』, 2014.
-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3.
-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2015.
- 이재분 외, 『다문화가족 역량개발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방안 모색』, 한국교육개발원, 2009.
- 조현성, 『이주민 모국문화를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최승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지자체 역할 강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4.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http://oneclick.law.go.kr>)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부록

1. 어촌 다문화가정 현장 조사 설문지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결혼이민자)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어촌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어촌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은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해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와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주관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조사기관 : (주)한국사회조사센터

다음의 질문들을 잘 읽어보시고 귀하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2. 다음 중 무엇이 귀하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힘들게 합니까?

<input type="radio"/> 집에서 너무 멀다	<input type="radio"/> 가족이 좋아하지 않는다	<input type="radio"/> 하는 데 때문에 시간이 안 난다
<input type="radio"/> 육아문제로 바빠다	<input type="radio"/> 프로그램이 별 도움이 안 된다	<input type="radio"/> 기타()

3. 다음 중 어떤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귀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겨울에도 쉬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바다 일이라 위험하다
<input type="checkbox"/> 어업으로 혼자인 시간이 많다	<input type="checkbox"/>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일차리를 구하기 힘들다
<input type="checkbox"/> 다른 결혼이민자와 만나기 힘들다	<input type="checkbox"/> 자녀 학원 보내기가 힘들다	

4. 다음 중 귀하가 현재 하고 계신 경제적 활동이 있다면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수산가공공장 근무	<input type="checkbox"/> 마을여강 수산물 채취	<input type="checkbox"/> 그물 낚기
<input type="checkbox"/> 수산물 식당 및 판매	<input type="checkbox"/> 통변역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고향 음식 관련 직업
<input type="checkbox"/> 모국 전통 민속 관련 직업	<input type="checkbox"/> 일반 기업체	<input type="checkbox"/>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5. 다음 중 귀하가 현재 하고 계신 사회문화적 활동이 있다면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결혼이민자 모임 ☐ 다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 SNS 활동 ☐ 기타()

6. 다음 귀하의 모국에 관계된 것들 중 귀하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 모국어 통역, 번역 ☐ 모국 음식 만들기 ☐ 모국 전통문화(춤, 노래) ☐ 기타()

7. 다음 중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 귀하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수산가공공장 근무	<input type="checkbox"/> 마을여강 수산물 채취	<input type="checkbox"/> 그물 낚기	<input type="checkbox"/> 수산물 판매
<input type="checkbox"/> 모국어 통변역	<input type="checkbox"/> 모국음식 판매	<input type="checkbox"/> 모국 전통문화 활동	<input type="checkbox"/> 방과 후 모국어 활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			

8. 한국에 3개월 이상 머문 모국의 가족이나 친척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아버지 ☐ 어머니 ☐ 남자형제 ☐ 여자형제 ☐ 기타() ☐ 없음

9. 인력사항

출신국가	나이	입국시기	배우자와 함께 한 시간	자녀 수
()	()	()	()년	()명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배우자)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어촌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은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해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와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관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조사기관 : (주)한국사회조사센터

- 귀하께서는 평소 다른 다문화가정과 교류하고 계십니까?
☐ ① 교류하고 있다(1번으로) ☐ ② 교류하지 않는다(2번으로)
 1-1.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다른 다문화가정과 교류하게 되셨습니까?
☐ ① 지역수월 ☐ ② 선주협회 ☐ ③ 어업인후계자 ☐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귀하께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다음 사항들 중 어촌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집에서 너무 멀다 ☐ ② 시간 맞추기 힘들다 ☐ ③ 겨울에도 바쁘다
☐ ④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싫다 ☐ ⑤ 도움이 되는 내용이 별로 없다
☐ ⑥ 참여 안 해도 충분히 만족한다 ☐ ⑦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⑧ 기타 ()
- 귀하께서 어촌 다문화가정으로서 어려움으로 와 닿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언어 등 의사소통의 문제 ☐ ② 자녀의 학습 및 생활관리 문제 ☐ ③ 가족(부부, 시부모)과의 관계
☐ ④ 경제적 문제(모국송금, 일자리) ☐ ⑤ 종교적 문제 ☐ ⑥ 주변 사람들의 인식
- 다음의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 지역연계지원방안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다문화가족센터 지부 ☐ ② 지역수월 연계서비스 ☐ ③ 지역 순환 방문서비스 ☐ ④ 어촌계 다문화교육
- 귀하께서는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지지함 ☐ ② 지지함 ☐ ③ 보통 ☐ ④ 지지하지 않음 ☐ ⑤ 전혀 지지하지 않음
- 결혼 이후 배우자의 모국 방문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하셨습니까?
☐ ① 방문 경험 없음 ☐ ② 농업 지원 모국방문 ☐ ③ 수월 지원 모국방문 ☐ ④ 지자체 지원 모국방문 ☐ ⑤ 전액 개인비용
 7-1. 수월의 모국방문단 지원 사업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① 지역수월을 통해 ☐ ② 어촌계장을 통해 ☐ ③ 어촌계원을 통해 ☐ ④ 들은 적 없다
- 현재 누구랑 같이 살고 있습니까?
☐ ① 시부모 ☐ ② 부부 ☐ ③ 형제 ☐ ④ 기타
- 귀하가 속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이름은 무엇입니까?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귀하가 속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입니까? () 가구
- 인적사항

나이	배우자와 함께 한 시간	자녀 수
()	() 년	() 명

2.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 조사 설문지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개발을 위한 설문조사(센터용)					
<p>안녕하십니까?</p> <p>해양수산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어촌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p> <p>귀하의 의견은 향후 어촌지역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p> <p>본 조사를 통해 얻은 모든 응답내용에 대해서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해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6년 4월</p> <p style="text-align: righ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small>KOREA MARITIME INSTITUTE</small> </p> <p> <input type="checkbox"/> 주관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input type="checkbox"/> 조사기관 : (주)한국사회조사센터(안경옥 과장, 02-780-2293) <input type="checkbox"/> 설문제출 : Fax : 0505-720-2261, Email : people4341@naver.com </p>					
응답자 성명		직위/담당업무	/		
연락처		기관명			
A. 담당 지역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제도/프로그램					
A1.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담당하는 다문화가정의 규모와 담당인력 규모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귀하가 소속된 지역을 토대로 작성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분	내용			
	담당 다문화 가구 수	지원 대상 다문화 가구 수	가구		
		지역별 다문화 가구 수 (* 총 가구수와 함께 표기)	농촌	반농반어촌	어촌
	담당인력	센터 전체 인력규모	가구	가구	가구
*** 도시지역 : 농업, 어업관련 활동이 전혀 없는 지역(ex. 공업, 상업 활동만 있는 지역등)					
A2.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어촌지역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지원제도나 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A3. 현재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어촌지역 다문화가정이 이용하기에 어느 정도나 불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리하다 ② 불리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리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불리하지 않다					
A3-1. 타지역 다문화가정과 비교했을 때, 어촌지역 다문화가정의 정부 지원정책 이용에 불리한 이유,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 가급적 상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A4. 귀하께서는 도시나 농촌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은 어느 정도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 없는 편이다 ⑤ 전혀 필요없다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B. 어촌지역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실태

- B1. 다음과 같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들 중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주시고, 전체 다문화가정 참여자 중 어촌 다문화가정의 참여 비율(%)을 작성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의 사업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업이 어촌 다문화가정에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현재 수행 사업		전체 사업 필요도				
	수행 사업 (√ 표시)	전체 대비 어촌다문화 가정의 참여비율(%)	매우 필요	필요한 편	보통	필요없는 편	전혀 필요없음
1. 본인	한국어 교육/ 통역지원		①	②	③	④	⑤
	한국문화 체험 및 교육		①	②	③	④	⑤
	국적취득지원		①	②	③	④	⑤
	성/가정 폭력 상담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법률상담지원		①	②	③	④	⑤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운영		①	②	③	④	⑤
2. 가족	건강/의료지원(임신 출산 등)		①	②	③	④	⑤
	여가/문화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직업 훈련, 취업상담/알선		①	②	③	④	⑤
	자녀양육		①	②	③	④	⑤
3. 지역 사회 / 공동	지역주민 교육지원		①	②	③	④	⑤
	주택지원		①	②	③	④	⑤
	한국인 대상의 다문화 인식교육		①	②	③	④	⑤

C.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협력

- C1. 앞으로 정부가 어촌지역 다문화가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부터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어촌(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의 개발
 ② 정부부처별 기관별 협조체제의 구축 및 강화를 통한 정책수행의 효율성 향상
 ③ 다문화가정 관련법의 개선 (사회보장에서의 차별 해소 및 사회서비스 확대)
 ④ 어촌의 생산활동 및 참여방안의 모색(직간접적인 지역내 경제활동 참여의 지원)
 ⑤ 어촌정착 결혼이민자의 적응을 위한 체험, 교육, 통역, 모임, 의료, 취업, 법률 지원 확대
 ⑥ 어촌지역 다문화가정의 보호방안 마련 (성/폭력으로부터 안전, 법률지원, 경제지원 등)
 ⑦ 어촌지역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방안의 모색
 ⑧ 어촌지역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편견)개선 교육 (가족, 어촌주민 등 대상)
 ⑨ 기타 ()

- C2. 다문화가정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지원방안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어촌지역 거점 다문화센터 지부 ② 지역수협 연계 어촌서비스 강화
 ③ 어촌지역 방문서비스 강화 ④ 어촌계 교육을 통한 지역 다문화 인식변화

- C3. 어촌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가능한 분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언어관련 활동(통번역서비스 등) ② 문화홍보 활동(지역축제 등)
 ③ 음식관련 활동(모국음식당 등) ④ 기타()

—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A5. 귀하께서는 도시나 농촌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은 어느 정도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 없는 편이다 ⑤ 전혀 필요없다

B. 어촌지역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실태

B1. 다음과 같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들 중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별로 어촌지역 다문화가정의 참여비율은 전체 다문화가정 참여 인원의 몇 %나 되는지 기재하여 주십시오. 또한 현재 사업 진행 여부 상관없이 각각의 사업이 어느 정도나 필요한지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필요 정도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내용	현재 진행 사업 표시 (√ 표시)	전체대비 어촌다문화 가정의 참여비율(%)	모든 사업 필요도 표시				
			매우 필요	필요한 편	보통	필요하지 않은 편	전혀 필요없음
1. 본인	한국어 교육/ 통역지원		①	②	③	④	⑤
	한국문화 체험 및 교육		①	②	③	④	⑤
	교육시설 지원		①	②	③	④	⑤
	국적취득지원		①	②	③	④	⑤
	성/가정 폭력 상담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법률상담지원		①	②	③	④	⑤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운영		①	②	③	④	⑤
2. 가족	건강/의료지원(임신 출산 등)		①	②	③	④	⑤
	여가/문화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직업 훈련, 취업상담/알선		①	②	③	④	⑤
	자녀양육		①	②	③	④	⑤
	자녀 교육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지역 사 회 / 공 통	직접적인 경제지원		①	②	③	④	⑤
	주택지원		①	②	③	④	⑤
	한국인 대상의 다문화 인식교육		①	②	③	④	⑤

C.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협력

C1. 앞으로 정부가 어촌지역 다문화가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부터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어촌(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의 개발
② 정부부처별 기관별 협조체제의 구축 및 강화를 통한 정책수행의 효율성 향상
③ 다문화가정 관련법의 개선 (사회보장에서의 차별 해소 및 사회서비스 확대)
④ 어촌의 생산활동 및 참여방안의 모색(직간접적인 지역내 경제활동 참여의 지원)
⑤ 어촌정착 결혼이민자의 적응을 위한 체험, 교육, 통역, 모임, 의료, 취업, 법률 지원 확대
⑥ 어촌지역 다문화가정의 보호방안 마련 (성/폭력으로부터 안전, 법률지원, 경제지원 등)
⑦ 어촌지역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방안의 모색
⑧ 어촌지역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편견)개선 교육 (가족, 어촌주민 등 대상)
⑨ 기타 ()

C2. 다문화가정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지원방안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어촌지역 거점 다문화센터 지부 ② 지역수업 연계 어촌서비스 강화
③ 어촌지역 방문서비스 강화 ④ 어촌계 교육을 통한 지역 다문화 인식변화

C3. 어촌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가능한 분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언어관련 활동(통번역서비스 등) ② 문화홍보 활동(지역축제 등)
③ 음식관련 활동(모국음식당 등) ④ 기타()

—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2016年 12月 29日 印刷

2016年 12月 31日 發行

편집겸
발행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전 화 051-797-4800 FAX : 051-797-481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상호 (주)디자인월드 Tel : 051-916-1533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02-394-0337

정가 15,000원